



# 아시아 지역 노동운동 보고서

2012.05.10

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팀

(류미경, 박상은, 신해경, 임월산, 정영섭, 조은석)

# 목차

- 3 서론
- 4 필리핀
- 17 인도네시아
- 26 캄보디아
- 38 태국
- 51 방글라데시
- 59 중국
- 71 결론

# 서론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은 이제 국경을 넘어, 점점 더 세계적인 차원에서 활동한다. 생산지를 쉽게 이동하고 쉽게 철수할 수 있는 능력, 세계적인 공급망을 형성해 보다 저렴한 제품 단가를 추구하는 능력은 자본에게는 엄청난 권력이다. 반면에 바닥치기 경쟁을 강요받은 노동자에게 이는 임금삭감, 열악한 노동조건과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 노동자가 일국 차원의 운동을 벗어나서 세계적 운동을 건설하지 않으면 자본과의 권력관계를 역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벌써 오래 전부터 지적된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자운동에서 한 나라 안의 관점을 벗어나 시선을 넓히고 국제적인 투쟁에 대해서 진정 고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핵심이유 중 하나는 다른 지역의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계형성이 부재한 것이다.

이 지적은 어느 지역보다 아시아지역에 대해서 특히 유효하다. 한국노동자는 다른 지역 노동자보다 타 아시아국가의 노동자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같은 대륙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일정 당연하기도 하다.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90년대를 거치면서 대폭 확대된 한국과 타 아시아국가 간 자본 이동, 투자와 무역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한국 자본은 인도, 필리핀, 방글라데시, 중국과 같은 나라에 진출해 현지 경제와 사회에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면서 각 국내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노동자는 자본이 진출한 통로의 역방향으로 이주해 한국의 유연한 축적 구조의 밑바닥에 통합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인 대응을 요구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소통과 공동행동의 기반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 다른 아시아국가의 사회, 노동자와 노동운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는 아직 미흡하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지역 노동자와의 국제연대를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서 각국 노동자가 처해 있는 현실을 소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민주노총이 2003년에 낸 동남아시아노동정세보고서의 업데이트와 대상 확대라는 성격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노동자운동연구소 국제팀의 첫 사업 결과이다. 국제팀은 2011년 7월부터 모임을 시작했고, 사업의 목표를 논의한 후에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조사사업을 진행했다. 조사는 관련 기사, 노조사이트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5개월 기간 중에 팀원 2명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을 방문해서 현지 노조와 사회단체를 만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기회가 있었다.

이 보고서는 6개 나라(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방글라데시, 중국)의 노동자운동 현황을 소개한다. 각 장의 구조가 다소 상이하지만 모두 1) 국가, 경제 기본 통계, 2) 역사적 배경(정치와 노동사), 3) 경제적 환경, 4) 노동법 제도, 5) 노동자운동 현황이라는 5개 주요 항목을 다루고 있다. 또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만큼 각 나라별 한국 노동자운동의 잠재적 또는 현실적 연대파트너를 지적하고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문헌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것이라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보다 자세한 조사, 구체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제공하기를 바라면서 보고서를 발표한다.



# 필리핀

The Philippines

## 국가, 경제 기본 정보

국명: 필리핀공화국(Republic of the Philippines)  
인구: 9,798만 명(2009)  
종교: 가톨릭(83%), 신교(9%), 회교(5%), 불교 및 기타(3%)  
민족: 말레이족(96%), 화교, 혼혈  
언어: 타갈로그어, 영어, 72개 지역언어  
면적: 30만km<sup>2</sup> (한반도 1.3배)  
GDP: 1,605억 달러(2009), 1인당 1,638 달러(2009)  
주요 산업: 서비스업 54.8%, 제조업 31.4%, 농업 13.8%(2007)  
주요 수출: 반도체, 전자제품, 운송기계, 의류(2007)  
주요 수입: 전자부품, 광물성 연료, 기계류, 철강제품(2007)

## 1. 역사적 배경

### 독립 이후, 친자본 노조들의 성장

제2차 세계대전이 일본의 패배로 끝이 나면서 미군이 다시 필리핀에 돌아왔다. 그 뒤 미국의 식민지배는 1946년 7월14일 공식적으로 끝을 맺고 필리핀은 독립을 하였다. 그러나 필리핀의 초대 대통령 로하스(M. Roxas, 1946~1948)에서부터 키리노(E. Quirino, 1948~1953)를 거쳐 막사이사이(R. Magsaysay, 1953~57) 및 가르시아(C. Garcia, 1957~61)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필리핀의 노동운동은 미군과 정부당국에 의해 철저하고 끊임없는 탄압을 받았다. 전후 동아시아의 세계질서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 간의 대립으로 보고, 소련 등 공산주의 진영의 남진을 봉쇄하는 것을 전후 국제질서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었던 미국으로서는, 자신의 서태평양의 최일선 전진 기지였던 필리핀 군도에서 공산주의에 경도된 사회운동의 싹이 자라고 있는 것을 도저히 감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일본점령기간(1942~45년) 동안 혁(Huk)을 비롯한 좌파 사회운동 지도부는 미군과 필리핀 정부를 대신하여 적국인 일본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러나 1945년 2월 미군이 다시 돌아왔을 때 타룩 등 Huk의 지도부는 그간의 공훈에 대해 치하를 받기커녕 미군에 의해 바로 체포·투옥되는 대접을 받았다. 이들과 더불어 다른 공산당 지도부도 모두 투옥되었는데, 이들에 대한 탄압에 항거하는 대규모 민중시위로 인해 미군은 그 후 이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전부 마닐라를 떠나 중부 루손 산악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서 반미·사회주의 혁명전쟁을 수행하게 되었다.

1940년대 후반 미군 군사고문단의 부추김을 받은 필리핀 정부군과 경찰은 공산당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거나 좌파적이라고 규정된 모든 노동단체와 그 지도부에 대해 가차 없는 탄압을 가했다. 그 주된 타겟이 된 것이 바로 PKP, Huk, 그리고 노동기구회의(CLO) 등인데, CLO는 전후 최초로 나타난 대표적인 좌파 노동운동조직으로 1945년 7월에 결성되었으며 PKP 당원이었던 발고스(M. Balgos)와 카파도시아(G. Capadocia), 그리고 헤르난데스(A. Hernandez) 등이 주도하였다. CLO는 조직이 창립된 이후 1년 동안에 무려 49회의 파업을 주도하였으며, 이 파업에는 연인원 4만여 명이 참가하였다. 이들 파업은 거의 대부분 성공적이었으며, 그 결과로 CLO에 가입한 노조원의 수는 크게 늘어나 초기의 1만명 수준에서 나중에는 10만명으로 불어났다. 한편 비사야스 지역에는 호세 나바(Jose Nava)가 주도하는 필리핀노동자연맹(PWF)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단체에는 1946년 말까지 237개의 노조가 가입하였으며 총 7만명의 노동자가 가담하였다.

### 마르코스의 독재와 '5월1일 운동'의 등장

마르코스(F. Marcos) 대통령의 집권 전반기인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필리핀의 노동운동은 크게 성장하였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학생운동이 노동운동에 동참함으로써 노동운동의 내적 역량이 강화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급진학생운동의 등장은 필리핀 노동운동의 역사에 새 장을 열었다. 학생들은 자신들만으로는 사회변혁에 성공하기 힘들고, 결국 노동운동 등 다른 사회운동과 힘을 합쳐야만 한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자각 위에 학생운동은 노동운동에 동참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급진적이고 투쟁적인 노조연맹인 자유노동자운동(KASAMA)과 전국노동자연합(PAKMAP)등이다. 이들 급진 학생운동의 중심에는 호세 마리아 시손(Jose Ma. Sison)이 있었다.

1968년에는 그간 지속적인 정부의 탄압과 내부의 분열로 인해 거의 와해 상태에 놓여 있었던 필리핀공산당을 재건하기 위한 시도가 시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그 해 12월 열린 공산당 재건을 위한 당 대회에서 시손을 중심으로 한 모택동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공산당(CPP)이 창설됐다. 시손은 이 모택동주의적 신(新)CPP의 의장이 되며, 이 재건 공산당의 군사기구로 신인민군(NPA)이 조직된다. 이를 계기로 필리핀의 좌파 사회주의 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며, 그동안 활력을 잃었던 사회주의 운동세력들이 CPP/NPA를 중심으로 다시 집결하기 시작했다.

마르코스는 1972년 9월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는 CPP의 재건과 NPA의 활동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이처럼 필리핀의 정치사회적 지형이 진보운동 쪽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것도 원인 중 하나였다. 1972년부터 1975년까지 4년 동안은 필리핀 노동운동에서 가장 암울했던 암흑기였다.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 계엄정권은 공산당과 좌파 사회운동 단체의 지도자 및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의 지도자, 민족주의적 정치인, 반마르코스 야당 인사 등 5,000여명의 사람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였다.

마르코스는 모든 종류의 파업을 전부 불법화하였으며, KASAMA, PAKMAP를 포함한 모든 진보적 노조들이 전부 불법화되었다. 진보적, 반마르코스적 노동운동을 어느 정도 정리한 마르코스 정부는 노동운동

을 정부가 만든 틀 내로 순치시키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1975년 12월 필리핀노동조합회의(TUCP)를 정부 주도로 결성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는 반독재 민주화를 주장하는 노동단체들이 새로이 결성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의 노동단체들과 달리 이들은 경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계엄정권 하의 인권 및 정치적 권리와 민주화를 주장하는 등 운동의 초점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국면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5월1일 운동(KMU)'이다. KMU는 1980년 5월1일 창설되었으며, 당시 10개의 노조연맹과 35개의 지역노조가 창설멤버로 참여하였다.

KMU 등이 처음부터 강경한 투쟁적 운동을 전개한 것과는 달리, TUCP는 온건 노선을 계속 고수하였다. 그러나 1983년 8월 베니그노 아키노(Benigno Aquino Jr.)의 암살은 상황을 급반전시켰다. 아키노의 암살 이후 노동운동 세력을 포함한 모든 반체제 민주운동세력과 마르코스 정권 사이의 적대적이고 폭력적 대립은 더욱 더 치열해졌다. 이 과정에서 TUCP 같은 온건적 노동단체들조차 마르코스 정권에 등을 돌리고 반체제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게 된다.

### 피플파워 이후 다양한 이념들의 분할공존

마침내 1986년 2월 '피플파워' 혁명이 일어나고 마르코스 정권은 무너지게 된다. 모든 노동운동 단체들을 포함한 민주운동세력이 하나로 힘을 모아 이 거대한 혁명을 성공시키긴 하였으나, 피플파워 혁명에 참여한 사회운동 세력들의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KMU가 취한 태도이다. KMU나 순수 좌파 진보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코라손 아키노(Corazon Aquino)와 그를 둘러싼 세력들은 결코 진보적 세력이 아니었으며, 필리핀의 기득권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을 원하지 않는 보수집단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가지고 있던 피플파워 혁명·아키노와 그를 둘러싼 집단·마르코스 이후 정치경제 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좌파 진영과 여타 진영 간 이러한 미묘한 견해 차이는 사실상 아키노와 라모스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필리핀의 노동운동의 구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필리핀 노동운동의 지평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에서 다시 진보 대 보수의 전통적인 이념적 대립 구도로 돌아간다. 라모스 대통령 정권 하에서 필리핀노동자연대(BMP, 1995년), 필리핀전국노동연맹(NCLP, 1995년), 진보노동자동맹(APL, 1996년) 등 새로운 노조연합체가 등장했다. 그리고 이들과 기존의 KMU, TUCP, FFW 등 다양한 노동단체들이 같이 공존하며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된다. 이제 필리핀 노동운동은 과거의 민주화운동이나 민족운동으로서의 성격은 약화되고, 그 대신 이념적 차이로 인한 다양한 스펙트럼의 노동조합들이 혼재하여 활동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진보·보수의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가장 좌측에 위치하는 것은 역시 KMU이다. KMU는 여전히 모택동주의적 공산주의 정당인 CPP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KMU의 급진적 노선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자체 내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최근에 그 세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편이다. 이념적

스펙트럼의 가장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TUCP와 FFW이다. TUCP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출발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황색노조로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친정부적, 체제지향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KMU와 더불어 가장 많은 산하 조직과 조합원을 가지고 있는 필리핀의 가장 대표적인 노조연합체이다. FFW는 세 번째로 큰 노조연맹으로 가톨릭 교회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전력을 갖고 있으며 이념적으로는 기독교 민주주의 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 외에 이념적으로 중도에 속하는 많은 노동단체들이 있는데,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것은 그 중에서도 비교적 좌파적 입장에 속해 있는 BMP, APL, NCLP 등의 노동단체들이다. 오늘날 필리핀에서 이념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는 노조들과 그 연합체들은 과거 서로 격렬히 대립하고 갈등하던 것과는 달리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정책적인 면에서, 그리고 의회정치와 선거정치의 장에서 긍정적인 대결을 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박승우(영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필리핀의 노동운동》 요약)

〈표1〉 필리핀의 노사관계 관련 공식정책

시 기	기본 정책	주 요 특 징
1901 - 1935	불개입 / 자유방임정책	미국 행정부와 소수의 엘리트 계급이 초기 노동조합 운동을 억제함.
1936 - 1952	강제 중재 / 사회 정의	공화제(Commonwealth regime)에서 정치적 독립으로 전환, 점차 정치화되는 노동운동, 사법 제도의 마련
1953 - 1972	협상에 의한 평화 / 자율적 상호주의	단체협상의 도입으로 ILO 영향력 증대
1973 - 1986	노동 행위의 규제	계엄령으로 파업 및 단체행동 통제, 노동법(Labor Code) 제정
1987 - 1997	노사정주의 / 협력	경제 회복과 정치적 변화로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분위기가 나타남
1998 - 현재	“개방 노동 취약성”	경제 위기와 국제적인 사건들이 취약한 정치적 지도부를 압도함.

(\*필리핀노총(TUCP) 보고서)

## 2. 경제적 환경

필리핀 경제의 문제로 열악한 인프라 및 산업 기반, 극심한 빈부격차(15대 명문 가족이 국부의 50%이상 점유, 연소득 270달러 이하 극빈층이 약 35%), 낮은 농업 생산성(노동력의 1/3이 농업에 종사하나, GDP 중에서 농업의 비중은 15%에 불과), 높은 인구 증가율(연 2.04%) 및 실업률(7.5%), 정부 부패 및 무능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적자가 있다.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동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경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마르코스 정권의 장기 집권에 따른 부패로 국가 발전이 정체되어 “아시아의 환자”로 불릴 정도가 되었다.

현재 필리핀 경제의 특징으로는 9백만 명에 달하는 해외 파견 근로자의 송금(※ 132.6억 불(2007) → 145.4억 불(2008) → 151.4억 불(2009)), 풍부한 자연 자원(매장량 세계 8위), 영어 사용, 저렴한 인건비,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의 성장세를 들 수 있다. 2007년 기준으로 100개가 넘는 기업에서 약 12만 명이 콜센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전력 및 에너지 등 인프라 투자 확대 추진과 같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적자 해소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총 상품수출에서 전자제품의 비중이 60%에 이르며, 수출대상국은 미국(16.9%)과 일본(16.4%)에 편중되어 있다.

〈표2〉 필리핀 경제 기본 통계

	2006	2007	2008	2009
GDP(억 달러)	1,175	1,440	1,675	1,608
1인당 GDP(달러)	1,270	1,530	1,740	1,640
경제성장률(%)	5.3	7.1	3.8	0.9
수출(백만 달러)	46,526	49,512	48,253	37,510
수입(백만 달러)	53,258	57,903	61,138	46,388
실업률(%)	8.0	7.3	7.4	7.5
물가인상률(%)	6.2	2.8	9.3	3.2

2008년 하반기부터 세계경기 침체로 성장률이 둔화되었으나, 2009년 2/4분기부터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지속적 유입,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으로 경기 회복세에 진입하였고 당초 마이너스 성장 예측에서 0.9% 성장을 기록하였다.

국제 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8년 외국인의 필리핀 투자는 전년 대비 26.9% 증가한 총 894개 프로젝트(4,431억 페소)가 승인되었다. 전력, 가스, 수자원, 부동산 순으로 투자가 활발하다. (국제노동협력원, 〈필리핀 개황〉)

### 3. 노동법·제도

####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표 각각 2인과 정부대표 3인으로 구성된 지방 노사정 임금 및 생산성 위원회(Regional Tripartite Wage and Productivity Boards, RTWPB)에 의하여 결정된다. 1989년까지는 의회가 법에 따라 전국적인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였으며, 계엄령 당시에는 행정수반(Chief Executive)이 결정하였다. 전체 기업의 30%만이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근로자 중 겨우 45%가 임금을 받는 봉급생활자로 분류된다. 27%는 무임금 가내기업 근로자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RTWPB가 지나친

‘예외’ 를 두어 최저임금제의 영향력을 없애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 지방 위원회에서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임금 결정의 절차는 오래 걸리고 번거로우며, 실제 조정된 액수가 실질 임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표가 경영자측과 담합을 하기도 한다.

1948년 5월 9일 처음 ILO에 가입한 이후, 필리핀은 지금까지 총 30개의 조약을 비준하였다. 이 중 6개 조약은 오늘날 7대 근로자의 권리, 또는 핵심 조약이라고 칭하는 내용에 속해 있는 것이다. (필리핀 TUCP 보고서)

### 필리핀 노동기준법

〈표3〉 필리핀 노사관계 기본 사항 및 노동기준법

분 야	공 식	비 공 식
2003년 노동자 수	5,706,460	20,013,540
고용율	18.62%	65.32%
생산의 성격	초국적 기업(TNCs)과 직접 관련된 생산 TNC 공급기업 해외영업 국내기업	TNC와 해외영업 국내기업과 관련된 다른 기업의 공급회사
노동기준법, 기업법, 기타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필리핀 의료보건(PhilHealth), Pag-ibig기금, 근로자보상위원회, 행정법, 정부서비스보험제도(Government Service Insurance System), 단체협약, 필리핀 품질대상(Philippine Quality Awards), 기업행동강령, 기업의 사회적 책임, UN 세계협약, 사회적 순응도, SA 8000 인증시스템, ILO, OECD 초국적기업 안내, ISO 14000, A1000인증시스템, GRI(GlobalReportingInitiative)가이드라인, GSP(Global Sullivan Principles)시스템, 모범사례 등. (Amante 2005, Macaraya 2005)	바랑가이 소액자본기업법 (Barangay Micro-Business Enterprise Law), 필리핀 기업법, 협력개발권법, 지방정부법, 해외근로자복지청, 필리핀해외고용청, 종합농업개혁법, 농수산업 현대화법, 소규모 농민을 위한 대현장, 설탕산업 사회개선프로그램, 중소기업개발위원회, 사회개혁과 빈곤감축법, 노동법의 일부조항, SSS, 필리핀 의료보건(PhilHealth), 근로자보상위원회법, 모범사례, 사회적 용인 등. (Tolentino, Sibal & Macaranas 2001)
적용범위 및 규정	TNC, TNC 관련기업과 해외영업 국내 기업에 대한 포괄적 적용 국내시장용 기업에 대한 보통적용	모호한 법과 모범사례 부족으로 적용도가 낮고 규정이 비효과적.
노동자 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NGO, 근로자연합, 소비자 연합, 정당, 재단, 학계, 등	시민조직, 노동조합, 협동조합, 동업조합, NGO, 사회시민 단체, 재단, 학계, 정당 등

(\*알란 몬타노(필리핀자유노동자연합 FWW위원장), 〈필리핀 사회, 노사관계와 노동조합〉)

### 근무시간 및 임금

생산직 주 44-48시간, 사무직 주 40시간이다. 시간 외 근무 수당은 정규 근무 시 기준 월급의 125%, 휴일 근로 시 130%,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날에 근로 시 150%이며, 법정 휴가로 5일의 연가, 6주간의 출산 유급 휴가, 모든 기혼 남성에게 유급 7일의 부성 휴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각 지역

별로 다르나, 메트로 마닐라의 경우 2009년 3월 현재 48페소/시간(비농업부문, 약 1,182원, 2010년 월 206달러), 43페소/시간(농업부문, 약 1,066원, 1페소는 24.74원)이다. 2006~2010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2.9% 정도로 물가상승률에 다소 못 미치고 있다.

〈표4〉 최근 5년간 일일 최저임금 현황(단위: US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비농업	농업								
8.4	7.6	8.4	7.5	8.9	8.0	8.9	8.0	9.4	8.5

평균임금은 대졸 초임 기준 월 평균 280달러 수준으로 최근 수년간 큰 변화가 없다. 필리핀 내에서는 매년 관련법에 의거,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실질적인 급여수준은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0년 10월 최저임금이 한차례 조정됨에 따라 2011년 경우 최저임금, 평균 임금 모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KOTRA 자료)

## 쟁 의

필리핀 경우 1990년대 노조가 득세했으나 2000년대 들어 노조의 영향력이 급감했다. 연간 실제 파업/직장폐쇄까지 가는 노사 분규는 연간 한자리 수에 머물 정도이다. 필리핀 노조관련 법에 의거, 노사 분규 발생 시 실제 파업/직장폐쇄까지 가기에는 아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 1단계 : 노사분규 발생, 노사간 협의: 분쟁 발생 사안 해결위해 노사 자체협의 시행
- 2단계 : 노사간 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 미해결시, 상기 노동중재위원회에 파업/직장폐쇄 관련 사항 신고
- 3단계 : 노동중재위 등 정부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 미해결시 일정 절차 거쳐 파업/직장폐쇄 조치 시행

필리핀 노사분규의 경우 파업, 직장폐쇄 등의 형태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실제 파업/직장 폐쇄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고, 사업장내에서의 폭력행위 발행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 피켓 시위 등 항의성 의사 표명이 일반적이다. 노사분규의 주요 원인으로는 계약위반, 부당 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이다. 80~90년대에는 노사 분규, 갈등이 심각했으나, 최근 연간 실제 파업/직장폐쇄에 이르는 건이 5건 내외에 불과할 정도이다.

## 4. 노동운동 현황

### 노조현황

2006년 기준 총고용인구 33,185,000 명 중 에서, 약 과반수(48.6%)가 서비스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1/3 이상(36.7%)이 농업 부문에 그리고 나머지(14.7%)가 산업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표5〉 고용 규모 및 민간 부문 고용 기준 기업 분포, 2003 (백분율)

규모	기업 수	고용
마이크로기업(근로자1-9 명)	743,628(91.8%)	2,151,552(37.7%)
소기업(근로자10-99 명)	60,785(7.4%)	1,319,166(23.1%)
중기업	2,922(0.4%)	402,927(7.1%)
대기업(200 명 이상)	3,027(0.4)	1,832,815(32.1)
전체 기업 수	810,362(100.0%)	5,706,460 (100.0%)

출처: 국가임금생산성위원회 (NWPC) NSO기업 조사, 2004

(\*알란 몬타노, 위의 글)

조합원 수를 전체 노동력 대비로 볼 때, 지난 3년(2002-2004)의 평균 조직률은 4.36%이다. 동기간에 고용된 전체 근로자 대비로 본다면 노조 조직률은 4.93%이며, 임금 수익자 가운데 노조 조합원 수로 계산하면, 노조조직률은 9.88%이다.

전체 노동력 대비 임금수익자의 비율은 2002년 43.2%에서 2004년 46.8%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불완전고용을 포함한 실업률이 2002년 28.4%에서 2004년 29.4%로 늘어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노조 조직가능 기반은 줄어들고 있다.

1989년에 보안 경비원, 관리자 고용인, 정부 공무원 등에게도 노조를 조직할 권리가 부여되면서 여건이 개선되었다. 투표 결과에 의해 자동적으로 노조가 인정되는 선거가 허용되었으며, 이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관련된 모든 근로자의 20%로 하향 조정되는 등 조건이 완화되었다.

〈표6〉 기존 노동조합수, 신규 등록 노동조합수

연도	기존 총 노동조합수	신규 등록 노동조합수	총 조합원 숫자	임금근로자비율
1996	7,882	632	3,586,835	20.2
1996	8,250	410	3,612,353	28.6
1997	8,822	342	3,634,638	27.0
1998	9,374	330	3,686,778	27.8
1999	9,850	335	3,731,076	27.1
2000	10,296	339	3,788,304	27.2
2001	10,924	489	3,849,976	26.7
2002	15,444	910	1,469,328	10.0
2003	16,091	647	1,516,862	9.9
2004	16,723	777	1,572,289	9.5
2005	17,132	492	1,910,166	11.7

(출처: 노사관계국. 2008. 7. 총 기존 노동조합수는 전국조합, 공공부문노조 포함)

〈표7〉 파업/직장폐쇄 통지제출, 실제 파업/직장폐쇄, 참여 근로자수

연도	파업 / 직장폐쇄 통지서 제출	실제파업 / 직장폐쇄	
		소계	참여 근로자수
1995	904	94	54,412
1996	833	89	32,322
1997	932	93	51,531
1998	811	92	34,478
1999	849	58	15,517
2000	734	60	21,442
2001	623	43	7,919
2002	752	36	18,240
2003	606	38	10,035
2004	558	25	11,197
2005	465	26	8,496
2006	353	12	1,415

(출처: 노사관계국, 지방노동청, 국가노동중재위원회. 2008. 7.)

## 주요 총연맹

### 1) 필리핀노동조합회의(TUCP) - 어용

필리핀노동조합회의는 1975년 12월 14일에 마르코스 정부의 지원 하에 설립되어, 현재 120만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과장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농업부터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분야, 공공 부문 및 공무원까지 포괄하는 전국 30개 노조와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비공식 부문, 운전자, 도시 빈민, 청소년 단체, 협동조합, 동맹체, 연대 및 기타 시민 사회 단체 등의 회원도 보유하고 있다. 2009년에는 이주노동자 가족단체가 가입하기도 했다. 국제노총(ITUC)에 가입되어 있다.

### 2) 자유노동자연맹(FFW) - 중도

기독교 계열의 영향을 받아 1950년 설립되었고 조합원 20만 정도이고 조합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5만 명 정도라고 한다. 마르코스 정권 당시, 정부지원을 받던 TUCP나 좌익성향의 KMU와 차별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8개 노조연맹과 2개 특별연맹이 있다. 교육기관, 은행, 제약회사, 전자회사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자유노동자연맹은 이전에 세계노동총연맹(WCL - 기독교계열)에 가입되어 있었고 현재 국제노총(ITUC)에 가입되어 있다. Juan C. Tan이 1950년부터 2001년까지 위원장을 했고 4번째 위원장으로 Jose Sonny Matula가 있다.

### 3) 5.1절운동(KMU) - 민족주의 좌파(공산주의)

KMU(Kilusang Mayo Uno)는 '진정한, 전투적인, 반제국주의적' 노총을 표방한다. 1980년 마르코스 독재 치하에서 창설되었고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다. 1986년에 위원장인 롤란도 올랄리아가 살해되었고 이는 군부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이래 초사법적 살해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고 있

다. 이미 수백 명의 노조운동가들이 그 동안 살해되었다. KMU는 필리핀 공산당(CPP)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80년대 필리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CPP가 모택동주의 게릴라전술로 인해 도시운동에서 주도력을 행사하지 못하자 KMU내에서 활동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분열이 발생하여 이후 많은 노조들이 KMU에서 분리되어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진보적 노동운동 내에서 가장 큰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노총(ITUC)에 비판적인 입장으로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새로운 노동 조합 국제연대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현재 규모는 25만 명 정도이다. 각 부문단체들의 연합 전선체인 BAYAN에 속해 있고, 이와 연관된 Bayan Muna party-list(비례대표)등을 통해 의석을 갖고 있다.

#### 4) 진보노동자연맹(APL) – 좌파(사회주의)

APL은 사회운동노조주의를 표방하는 노총이다. 노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문의 노동조직을 포괄하는 “다중형태 센터”로서 1996년에 결성되었다. APL은 모든 형태의 노동자와 노조를 인정하고 조직하고 동원하는 전략으로 사회운동노조주의를 발전시켜서 사회변혁에 이르고자 한다. 악바얀(AKBAYAN)으로 불리는 시민행동당(Citizen's Action Party)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KMU 및 CPP에서 분리된 세력이다.

#### 5) 필리핀노동자단결(BMP)– 좌파(사회주의)

BMP(Bukluran ng Manggagawang Pilipino, Unity of Filipino Workers)는 전투적, 민주적, 사회주의적 노동자 조직을 지향하는 연대체이다. 10만 이상의 조합원과 200개 이상의 지역노조들을 포괄한다. BMP는 KPUP이라고 하는 지역노동조합대표자 조직을 통해 800개 이상의 독립적 노조, 20만여 명에게 영향력이 있다고 전해진다. 제조업, 서비스업, 화학, 광산, 농업, 건설, 운송 등의 부문에 조직되어 있다. 1993년에 결성되었다.

당시 대부분의 KMU 소속 노조들이 KMU의 스탈린주의적, 모택동주의적, 분파주의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탈하여 BMP를 결성하였다.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BMP의 사업방식은 산하조직에게 BMP 산하의 연맹조직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당(Partido ng Manggagawa)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 현재 상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와 2002년 질병 파동 이후, KMU(노동절운동)과 진보노동연합(APL)은 조합비를 납부하는 조합원 20%를 잃었다고 보고했으며 자유노동자연합(FFW)는 직장폐쇄나 감량경영으로 조합원의 15%를 잃었다. 세계화 충격의 결과로, 많은 노동조합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임금인상동결을 선택해야 했으며, 심지어는 단체협약동결까지 해야 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동결의 손을 들어주며 "적법한 계약의 자유 이행"으로 판결했다. APL의 사무총장인 조슈아 마타(Joshua Mata)의 말에 의하면, 이 판결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전국에 있는 200여 개 수출가공지역(EPZ) 기업에 대한 필리핀노동조합회의(TUCP)의 조사에 의하면, 수출가공지역의 근로자들, 특히 섬유회사의 근로자들은 적은 임금, 초과 업무, 보험혜택 전무, 그리고 근로시간 중 여성근로자 화장실 폐쇄 등의 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이 사실상 불가능하

다. 카비테(Cavite)지역 수출가공지역에 있는 세 전기회사의 인력통제 방법에 대한 또 다른 보고서를 보면 이들 세 회사의 방법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기업들은 어리고, 경력이 없고, 빈곤가정 출신의 직장이 필요한 지역 여성들의 노동시장 취약성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 미묘한 노조 회피 및 파괴활동을 벌였다. (알란 몬타노)

## 5.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

필리핀은 전 세계에 800만 명의 이주노동자를 보내고 있고, 노동력 수출을 국가 중심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을 ‘현대의 영웅’ 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송금 등을 위해 필요할 때만 그럴 뿐이며 실질적인 권리 보호조치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운동 내에서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직화와 권리옹호 운동이 일찍부터 있어 왔다. 이 운동도 정치적 경향에 따라 갈라져 있다. KMU 친화적인 MIGRANTE INTERNATIONAL이 있는데 이는 이주노동자 조직으로서 전 세계 각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APL 친화적인 단체로 Center for Migrant Advocacy, Migrant Forum Asia 등이 있다. 필리핀노조의 이주노동자 관련 활동은 다음과 같다. APL은 홍콩 내 필리핀 노동자들의 노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식품노련 (International Union of Food, IUF)의 후원 하에 APL과 홍콩의 유관 기관은 홍콩 내 필리핀 노동자들의 노조화 및 권익 보호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였다. 자유노동자연맹(FFW)은 마닐라에 이주 노동자 단체를 조직하고, 다른 노조들과 함께 이주 노동자 관련 ILO 협약 채택 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지원하였다.

국제건설목공노련(BWI) 산하 단체인 전국건설노동자연합(National Union of Building and Construction Workers, NUBCW)은 중화 건설노동자연맹(National Federation of Chinese Construction Workers' Union)과 공동으로 대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필리핀 건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회원 및 잠재적 회원을 관리하기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필리핀의 공공서비스노조 인터내셔널(Public Service International, PSI) 산하 기관들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필리핀 이주노동자 고충 해결과 관련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Toyota Philippines 투쟁 사례	
<p>Toyota 자동차는 필리핀 내 완성차 조립공장과 판매 대리점 운영 중 도요타의 필리핀 근로자들은 2000~2001년에 걸쳐 노조원들의 투표를 통해 도요타필리핀노조(Toyota Motor Philippines Corporation Workers Association) 설립을 추진했으나 모기업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노사협상 대표권 불인정) 노조 간부와 관계자 233명을 불법 해고 조치했다.</p> <p>TMPCWA 측 주장에 따르면 사측이 노조원에 대해 회유를 시도(불법 해고된 노조원에 대해 보상금을 지</p>	<p>급할테니 더 이상은 불법 해고를 문제 삼지 않겠다는 문서에 서명할 것을 권고, 승진을 미끼로 노조 탈퇴 권고), 조립공장내 카메라 설치(특히 노조원이 근로하는 자리에만 카메라 집중 설치)등 부당 행위를 가했으며, 이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2003년). ILO 조사가 시작되자 사측은 바로 노조와 협상함과 동시에 필리핀 노동부의 허가를 받은 신규 노조(Toyota Motor Philippines corporation Labour Organization)의 설립을 지원했</p>

다. 그러나 기존 노조(TMPCWA) 관계자 및 해고자들은 사측 결정에 반대, 노동부 및 사측에 항의 표시를 했다. 항의시위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고, 20여명이 경찰에 연행된바 있다. 현재까지도 해고 노조간부 복직, 노사협상 대표권 인정을 주장하며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필리핀항공(Philippine Airline) 투쟁 사례**

필리핀항공 노동자연합(PALEA)은 2010년 하반기에 사측이 2천 4백명에 달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자리를 외주화하여 계약직·파견직으로 채우려는 구조조정에 맞서서 투쟁해 왔다. 회사의 이러한 시도는 비정규직화, 노조파괴의 노골적인 시도였다. 필리핀항공노동자연합은 마닐라와 세부 국제공항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하며 각종 거리 투쟁과 연대투쟁으로 이에 맞서 왔다. 용역깡패들이 이 농성장을 두 번이나 공격하여, 많은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노동자들은 다시 원래 일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필리핀항공은 국유기업이었으나 필리핀에서 두 번째 부자인 루시오 탄(Lucio Tan)에게 매각되었고 이제는 공항서비스, 기내서비스, 발권예약서비스 등을 분사하여 노동자들을 해고시켜 비정규직으로 이러한 자회사들에 고용하려는 것이다. 이미 일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다시 들어가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3월 현재에도 1,8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마닐라공항 제2터미널 주차장을 거점으로 하여 농성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진 수빅조선소 노동자 투쟁 사례**

한진중공업 수빅 조선소는 2006년 필리핀 정부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건설이 시작되어 2007년 12월 1단계 완공, 2009년 4월 2단계 완공을 마쳤다. 현재 2만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약 4만 5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다. 수빅 자유경제구역에 위치한 한진중공업 조선소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직접투자 중 하나였다.

필리핀 한진중공업 수빅만 조선소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필리핀 현장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 해고, 노조 탄압이 현지에서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2011년 7월 3일, 마닐라부터 수빅조선소까지 100Km에 걸쳐 행진을 하며 대규모 집회를 벌였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조선소 건설 사업은 그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냈다. 필리핀 현지 수빅 조선소에서 3년간 근무하다 해고를 당한 조이 곤잘레스 씨는 “저희들이 확인한 사망자는 3년간 31명이지만, 노동관계청은 사망자가 40명에 이른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추락사고도 있었고, 폭발에 따른 화상으로 인한 사망도 있었으며, 용접업무를 장시간 하다가 폐에 화학물질이 너무 가득 차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목숨을 잃었거나 말라리아 등에 따른 사망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각종 산재사고 뿐 아니라, 한국 관리자들의 가혹행위와 고용불안 등 근무 환경의 열악함 또한 필리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한진은 일단 모든 필리핀 노동자들을 하도급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는데 각 하도급업체들은 산재를 예방할 만한 능력이 안 돼 고용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며 “또한 한국 관리자들이 필리핀 노동자들에게 못되게 굴고 있다”고 밝혔다. 때문에 필리핀 수빅만 공장 노동자와, 한국에서 연대하는 한진중공업 노동자 600여 명은 지난 3일, 행진 등을 벌이며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다. <참세상 2011. 7. 4일자>

6. 맺음말

필리핀에서는 마르코스 독재치하에서 정권의 지원을 받아 결성된 필리핀노동조합회의(TUCP), 계엄하에서도 반독재 민주화투쟁을 치르며 조직을 결성하고 투쟁을 지속한 5.1절운동(KMU), 중도적인 자유노동자연맹(FFW)등이 초기 노조운동을 형성하였다. 특히 KMU는 필리핀공산당(CPP)과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노동자 투쟁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민주화 투쟁 속에서 농촌게릴라 전술을 주로 하는 CPP의 투쟁방식과 경직된 정치노선 등은 그 내부에서 거센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후 CPP와 KMU에서 많은 그룹들이 분리되어 나오면서 분열양상을 보여 왔다. APL, BMP 등이 그러한 노조연합체들이다. 정치노선의 분립은 노동운동 내의 분리뿐만 아니라 진보운동의 제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90년대 후반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공세, 비정규직화, 노조에 대한 공격 심화 등은 노조운동에 새로운 도전을 안겨 주었다.

지금 필리핀 노동운동은 분열된 노동운동의 단결 실현이라는 역사적인 과제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의 노동 불안정화에 맞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인도네시아

Indonesia

## 국가, 경제 기본 정보

국명: 인도네시아공화국(Republic of Indonesia)

인구: 237,424,363 (2011)

실업률: 6.56% (2011)

비공식부문: 60% (2010)

종교: 회교(86.1%), 신교도(5.7%), 가톨릭(3%), 힌두교(1.8%), 기타(3.4%) ('00)

민족: 자바족(40.6%), 순다족(15%), 마두라족(3.3%), 미낭카바우족(2.7%), 베타위어족(2.4%), 부기스족(2.4%), 반텐주(2.0%), 반자르족(1.7%), 기타(29.9%)

언어: 인도네시아어(국어) 및 740여 방언과 언어

면적: 1,919,440 km<sup>2</sup> (한반도의 9배)

GDP(PPP): 1조1050억 달러(2011), 1인당 4,657 달러 (2011)

산업구조: 공업 46.48%, 서비스 37.1%, 농업 16.5% (2010)

노동인구: 117,370,485명 (2011)

산업별 노동인구: 서비스 48.9%, 농업 38.3%, 공업 12.8% (2010)

수출 파트너: 일본 16.3%, 중국 9.9%, 미국 9.1%, 싱가포르 8.7%, 한국 8%, 인도 6.3%, 말레시아 5.9%

수입 파트너: 중국 15.1%, 싱가포르 14.9%, 일본 12.5%, 미국 6.9%, 말레시아 6.4%, 한국 5.7%, 태국 5.5% (2010)

주요 수출: 석유, 가스, 전자제품, 합판, 고무, 의류

주요 수입: 기계류, 연료, 화학, 식품

## 1. 역사적 배경

동남아시아 대부분 나라와 유사하게 인도네시아의 현재는 식민지 과거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서양과의 접촉은 16세기부터 시작되었다. 1512년에 말루쿠 지역의 육두구, 정향, 큐베브 후추 무역을 독점하려는 포르투갈 상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도착하였다. 영국과 네덜란드 상인들이 바로 따라왔다. 1602년에 네덜란드 상인들이 동인도회사를 설립하면서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내에서 지배적인 유럽 강국이 되었다. 1800년에 네덜란드 정부가 파산한 동인도회사를 해산시켜 네덜란드령 동인도 식민지를 건설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식민지화하면서 네덜란드의 통치는 끝났다. 3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머물렀던 일본은 1945년 패전과 함께 물러나고, 1945년 8월 17일에 독립운동 지도자인 수카르노가 인도네시아 독립을 선포하여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나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다시 지배하려고 하였고,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 맞서 3년에 걸친 무장투쟁과 외교적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1949년에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독립을 인정하였다.

1968년에 수카르노 통치 하에서 군부 수뇌부와 인도네시아공산당(PKI)이 대립적인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공산당은 반서구 민족주의적 수카르노 정권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자율성을 유지하였다. 1950년대에 경제가 악화되면서 공산당은 노동자계급을 조직하고 외국인 자본을 상대로 여러 성공적인 파업을 주도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반면에 미국은 군대 내 보수 세력을 지원하고 키웠다. 1965년 미국의 지원 아래 수카르노를 제거하려는 쿠데타가 발생했지만 육군이 이를 막는 데에 성공하였다. 이후에 미국 CIA는 수카르노 지지 세력으로 분류된 인물과 공산주의자 5천 명의 명단을 쿠데타 주도세력인 수하르토 장군에게 넘겼다. 쿠데타 주도자를 처벌한다는 빌미로 수하르토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을 감금하고 살해하였다. 과정에서 50만~100만 명이 학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이 1965년 9.30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인도네시아 공산당은 완전히 무력화되었다. 군대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수카르노 정권은 많이 약화되었다.

여러 공작을 통해 수하르토는 수카르노로부터 점점 더 많은 정치적 권한을 넘겨받았고 1967년 국회의 임명으로 대통령 직무대행, 그 다음해에는 대통령으로 임명되었다. 수하르토 정권은 미국의 정치적 지지와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수출지향 산업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그는 경제성장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1998년까지 억압적인 독재통치가 지속되었다. 이 시기에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도 심각했다. 1993년 군부가 시계공장 파업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성 활동가인 마르시나에 대한 강간 · 살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군부는 노골적인 탄압과 더불어 노동운동에 대해 화해 · 포섭 전략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1990년대 수카르노의 최저임금 정책을 부활시킨 점이 그렇다. 정부는 단일 고용노조만 허용했지만 노동운동단체의 설립과 활동은 묵인했다.

1997~8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수하르토에 대한 대중적 불만이 폭발하였다. 수하르토가 사임하고 부통령인 하비비가 권력을 승계하였다. 1년 후인 1999년 10월에 와히드 대통령과 메가와티 부통령이 취임했으나, 2001년 7월 와히드 대통령은 축출되고 메가와티가 대통령직을 승계하였다.

2004년에 첫 직접선거가 실시되고 뻬짜실라(Pancasila) 이데올로기를 표방하는 민주당 후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가 당선되었다. 뻬짜실라는 유일신에 대한 믿음, 인도주의, 민족주의, 협의적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라는 5가지 원칙을 포함하는 산스크리트어 단어이다. 사회적 파트너십의 의미를 내포한다. 수하르토 시절에 노조탄압의 이데올로기로 사용되었는데 지금도 복잡한 교섭 · 중재체제와 파업에 대한 제한을 정당화하는 데에 사용된다. 2009년 대선에서 유도요노는 재선에 성공했다.

## 2. 경제적 환경

수하르토는 상당한 경제적 발전을 이룩했다. 1968년과 1996년 사이에 평균 성장률은 7.0%였다. 80년대 이후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제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으로 수하르토는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구사하며 외국자본을 들여오기 위해 값싸고 순종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노동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러나 아시아금융의기가 발생 후에 경제는 침체되었다. 1995년~2005년에 성장률은 평균 2.9%로 하락하고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은 1997년에 7%에서 1998년 58%로 상승한 후 2005년에 10%로 하락했다. 해외직접투자는 1998년 마이너스가 되었다가 2005년에 회복되었다.

경제위기의 여파로 비정규직, 비공식 부문 노동자가 대폭 확대되어 2005년 기준으로 비공식 부문은 노동자 인구의 60%를 차지한다. 경제위기의 대안으로 정부는 민간부문 부실자산을 구입하여 민간부문 자산을 통제하게 되었고 현재 164개 공공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2004년 이후에는 경제가 회복되어 인도네시아는 경제성장을 다시 경험하였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 실업과 불안정 고용과 인플레이션은 핵심 문제로 지속되었다. 빈곤율은 13.3% (2010년 기준), 실업률은 7.1%(2010년 기준)이다. 불안정 노동을 포함하면 훨씬 높다.

빈곤과 실업은 이주로 이어진다. 현재 600만 명의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가 해외에 체류 중이다. 이 중에 미등록 노동자를 포함해 220만 명이 말레이시아, 150만 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한국에 약 3만 명이 체류하고 있다.

## 3. 노동법제

### 노동에 관한 주요 법률

헌법은 노조에 가입할 권리와 쟁의권을 보장하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1957년에 ILO 제98호 조약을 비준했다. 그러나 1998년까지 법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다. 1998년 수하르토 정권이 무너진 후에 ILO 제87호 조약이 비준되었다. 이후 입법된 3가지 법안을 통해서 현재 노동법제가 형성되었다.

(1) 제20호 노조법은 ILO 제87호, 제98호 조약의 내용을 포함해 구체화했다. 수하르토 시기의 노조 등록제를 폐지하고 설립신고제를 도입하였다. 1998년 이전에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서 노사정 3자 협의회 주관으로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찬반투표를 실시해야 했다. 종업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노동조합 설립시 사용자의 동의요청과정이 있었다. 2000년에 개정된 노조법 하에서는 노조설립을 경영진에 통보만 하면 되고 과반수의 찬성도 필요하지 않다.

(2) 2003년 인력법(Manpower Law)은 노동시간, 외주화, 최저임금 등 노동조건에 관한 기준을 규정하

였다. 최저임금은 시군차원에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는데, 지역적으로 심한 격차가 있다. 노총들은 최저임금에 관련한 활동을 중시하는데 2002년과 2006년 사이에 평균 최저임금은 20% 상승했다.

(3) 2004년 노동쟁의조정법은 중재제도를 규정하였다. 노동쟁의의 해결 절차는 1) 노사 교섭, 2) 중재인을 통한 조정(conciliation), 중재(arbitration), 3) 노사관계 법정, 4) 대법원으로 규정된다.

## 노조 설립과 해산

노조법상으로 노동자 10명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노조법 제2조는 노조가 팠짜실라(Pancasila)를 노사관계의 기초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노조의 입장이 팠짜실라와 상반되면 법원에 의해 해산될 수 있다. 강제 해산된 노조의 간부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3년 동안 금지된다.

## 단체교섭

노조법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있고, 실제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력법은 한 사업(장)에 한 단체협약이라는 원칙과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 노조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51%이상 조직률을 획득해야 교섭대표권이 부여된다. 51%에 미달했을 시에는 노동자 과반수가 승인하면 대표권을 갖게 된다.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노동자 과반수를 조직한 노조가 대표권을 갖게 된다. 과반수를 조직한 노조가 없으면 통합 조직률이 51%될 경우 연합교섭을 할 수 있다. 산별 교섭에 관련한 법제도는 없다. 교섭은 시작된 날부터 30일 안에 체결되지 않으면 중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반적으로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교섭과 단협 체결 정도는 낮다. 2002년 조사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25인 이상 사업장 중 불과 14%만 등록된 단협이 있다. 교섭을 거부하거나 성실하게 응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법적 제재는 없다.

## 파업

중재 절차를 마치고 노사 양쪽이 교섭의 실패를 선포해야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노조는 파업의 시작과 종결, 파업의 이유, 집회 장소 등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는 사용자에게 파업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 또한 법은 ‘공익에 복무하는’ 산업과 필수업무산업의 파업을 금지하지만 이러한 산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아 정부의 사안별 판단에 맡긴다. 불법 파업 시 사용자가 2차례의 복직요청을 통보한 후에는 파업노동자를 사직한 것으로 간주해도 된다.

## 4. 노동운동 역사와 현황

### 1998년 이전 역사

네덜란드 통치 하에서 조직되기 시작한 노동조합 운동 지도자들은 독립운동가였다. 노동운동의 역사적인

성장과정은 노동운동과 정치를 긴밀하게 결합시키고 1950년대에 대부분의 정당들은 노동조합과 제휴했다. 1958년 당시 인도네시아에는 13개의 중앙노동조합 조직이 있었고 공산당(PKI)과 관계가 있는 전인도네시아 노동자중앙조직(SOBSI, 1947년 창립)이 전체 조합원의 절반(2,733,000) 정도를 차지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인도네시아 공산당의 집권전략은 선거를 통한 혁명이었기 때문에 PKI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치적 동원에 역점을 두었다.

수하르토 이전 시기의 양대 정치세력은 노동조합과 군부였다. 군부와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에서 갈등하고 있던 중, 수하르토를 중심으로 하는 군부가 육군 내에서의 살해사건을 빌미로 정권을 장악하여 SOBSI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수십만 명의 노동자와 농민을 살해하면서 권력을 장악했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노동세력이 성장하면서 수하르토는 그 동안 노동운동을 불법시하였던 정책을 바꾸어 1973년 전인도네시아노동자총연맹(FBSI)을 유일한 총연합단체로 출범시키고 그 산하에 21개 산업별 연맹과 26개 주단위 지역별 노동조합 지부, 8,210개의 단위사업장 노조를 편성했다. FBSI는 277만 명 정도의 조합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만 조합비를 내는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에 불과했고 주로 정부의 보조에 의존했다. 1985년 FBSI는 조직의 명칭을 전인도네시아근로자총연합(SPSI)로 바꾸고(명칭에서 노동자(buruh)가 근로자(pekerja)로 바뀐) 중앙지도부의 통제력을 강화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1995년에는 명칭을 다시 FSPSI로 바꾸었다. 수하르토 시기에 노동조합의 활동은 매우 침체되어, 1950년대에 연 평균 2,574건의 쟁의가 발생하였으나 수하르토 통치(1973년-1981년) 하에서는 쟁의 건수가 연평균 980건에 머물렀다.

이 시기의 특징은 노동운동단체의 활동이다. 수하르토 정권이 선택적으로 묵인한 이 단체들이 노동자 교육, 조직, 파업 조직화 등과 같은 활동을 전개했는데 수하르토 체제 말기 노동운동의 분산적 성격을 형성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

## 1998년 이후 역사와 현황

수하르토 체제가 무너지면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노동정책은 노골적인 탄압에서 자유화로 변했다. 노조가 많아지고 정부가 노동문제에서 퇴각하면서 자본은 다원주의를 철저히 이용했다. 어용노조를 조직하거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민주노조를 탄압한 것이다.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지만 정부는 개입하지 않았다. 정부의 부패로 노동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었고 자본의 일방적인 횡포가 유지되었다.

1998년 6월 인도네시아 정부가 ILO 87호 협약을 비준하여 노동조합 조직결성의 자유가 확보되었다. ILO 협약이 비준된 2개월 후 기존의 총연합단체인 (F)SPSI(The Federation of All-Indonesian Trade Unions)는 KSPSI와 FSPSI-Reformasi로 나뉘었다. FSPSI-Reformasi는 ICFTU-APRO(국제자유노련아태지부)의 도움을 받아 2001년 5월 총연합단체인 ITUC(KSPI)(Indonesia Trade Union Congress, 인도네시아노조회의)를 건설했다.

1998년에 1992년에 창립된 공산주의 계열의 SBSI가 합법화되었다. SBSI는 초기에 관심을 끌었으나 독단

적인 조직운영과 정치적인 활동으로 현장노동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했다. 비슷한 시기에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 디타 사리(Dita Indah Sari)가 FNPBI(National Front of Indonesian Worker Struggle, 인도네시아노동자 투쟁전선)를 만들어 전투적인 노동조합 운동을 이끌었으나 FNPBI는 대중적인 노동조합 사업보다는 투쟁체적인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조직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에는 ‘자본주의와 이를 지지하는 정권에 맞서 단결하자, 진보적·전투적·민주적·독립적 노조 운동을 건설하자’는 슬로건 아래 새로운 연맹인 PPBI(인도네시아노동운동노조)가 건설되었다. FNPBI는 창립총회에 참석했다. 현재 주요 노총이 3개 존재한다.

〈표1〉 인도네시아 노총과 산하조직 수(2006년 기준)

명 칭	연맹	사업(장) 노조	조합원	성 격
KSPSI	16	6,122	1,657,244	어용
ITUC(KSPI), 국제노총 가입	10	1,101	793,874	독립 (비민주주의 운영방식이 아직 문제됨)
KSBSI, 국제노총 가입	11	1,307	227,806	공산주의
Natl Fed. of Trade Unions	3	833	268,509	????
비가맹 연맹	50	1,677	403,714	-
비간맹 사업(장) 노조	-	1,237	305,959	-

한편, 노총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스스로를 노총으로 표방하고 있으며, 민주적이고 전투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노조연합체들이 있다. KASBI와 GSBI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KASBI(Konfederasi Kongres Aliansi Serikat Buruh Indonesia,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연대회의 총연맹)는 2005년에 결성되었으며 현재 30대 여성노동자인 니닝 엘리트스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약 12만 명 규모라고 하며 주로 자바지역에서 활발하다. “MUDA BERANI MILITAN - YOUNG, BRAVE, MILITANT”를 주 슬로건으로 삼고 있으며, KSPSI, KSPI, KSBSI를 모두 친정부적인 노조로 보고 있다. 조합원 주 연령대가 25세~40세로 매우 젊고 2010년 유도요노 대통령 취임식 당시 전국집회를 개최하며 공개적으로 현정부 반대를 선언했다.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최저임금 인상 투쟁, 계약직/외주화 문제에 주로 천착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2011년 대의원대회에서는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계약직/외주화 시스템에 대한 투쟁, 미가맹 노동조합 조직화 사업, 해외 진보적 노총들과 국제연대(한국 민주노총, 인도노총, 브라질노총 등), 노사정위원회 참가권리 쟁취를 통해 정부 노동정책에 개입 등을 주요 과제로 결의했다고 한다.<sup>1)</sup>

GSBI(Gebungan Serikat Buruh Independen, 인도네시아 독립노조연맹)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규모는 5만 명 정도라고 한다. 2012년에 스스로 총연맹으로 선언할 예정이다. GSBI는 ‘반제국주의, 반봉건주의, 반관료자본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민주적, 전투적인 참 노동조합’으로 스스로를 표방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따른 노동 유연화 문제, 최저임금 현실화 문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등에 대응하고 있으며, FPR(Front of People's Struggle, 민중투쟁전선)을 주도적으로 결성하여 농민, 학생, 여성 등과 연대하고 있다. 주로 필리핀 KMU와 국제적인 연대망을 형성하고 있다.

1) 세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지위를 보장받는데 비해 KASBI는 배제되어 있어서 공식적 총연맹 지위는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 주요 노동정책이 항상 노사정위에서 논의되어 정부에서 통과되므로 노사정위 개입·투쟁이 중요하다고 한다.

기존 노총들에 비하면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정부와 자본으로부터 자주적이고 민주적이며 투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노조연합체들을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리포트(Freeport) 노동자들의 투쟁**

인도네시아 웨스트파푸아 지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금광 및 구리광산인 Grasberg 광산을 미국의 초국적 광업기업인 Freeport McMoRan이 운영하고 있다. 1967년에 수하르토의 지원을 받아 Freeport가 광산개발을 시작한 이래 가장 길고 가장 많은 노동자가 참가하는 파업투쟁이 2011년에 벌어졌다. Freeport 22,000 노동자 가운데 3분의 1인 8,000여명 이상이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파업에 나섰고 파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동안 엄청난 환경 파괴와 토지 약탈 등에 분노하던 광산 주위 지역 주민들도 노동자들의 투쟁에 동참했고, 광산과 공항,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를 봉쇄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국내외 주요 언론들은 주로 파업이 회사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도하면서 이 역사적인 투쟁을 알렸다. 또한 정체불명의 괴한이 광산지역 근처에서 노동자들에게 총을 쏘는 것이 여러 차례 보도되었다. 사측은 정부 경찰이나 공무원들에게 주는 ‘보안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적어도 11명의 노동자들이 2009년에서 2011년 사이에 괴한들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과거 수하르토 체제 하에서도 프리포트 노동자들은 이런 식으로 탄압을 당해왔다.

프리포트 노동조합은 프리포트 사의 다른 지역 광산 노동자들이 자신들보다 임금을 10배 이상 많이 받는 상황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규탄하며 시간당 1.5~3달러인 임금을 7.5~43달러로 인상하라고 요구하였다. 사측은 처음에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을 하지 않았고 외면과 탄압으로 일관하다가 이후 아주 작은 비율의 인상만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공권력 역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프리포트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해서, 인도네시아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프리포트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메시지가 쏟아졌고 연대기금이 답지하였다.

결국 파업 3개월째인 12월 15일 경에 노사는 향후 2년간 임금 37% 인상과 복지혜택 확대에 합의하고 3개월간 계속된 파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줄리 파롱안 노조 대변인은 "2년간 37% 임금 인상안에 서명했다"며 "이것은 우리 투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회사가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우리의 열망에 계속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파업은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장기 파업으로 기록되며, 1965~66년 군사독재에 저항한 노동자 파업 이후 가장 상징적인 파업으로 여겨진다.

**노동운동의 특성**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의 낮은 조직률, 약한 교섭력, 낮은 단체협약 체결 정도 등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1) 노동시장에서 노동력 공급이 수요보다 많아서 노동자의 협상력이 약한 점, 2) 노동자들이 학력이 낮고 (3분의 2가 중졸 이하) 농촌문화 속에서 성장하여 조직결성과 단체행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식이 약하고 합리적인 단체교섭에 익숙하지 않은 점, 3) 외국인 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들은 언제든지 임금과 노동권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교섭력을 약하게 만드는 점, 4) 낮은 교섭력은 저임금을 낳기 때문에 저축이 어렵고, 따라서 노동운동에 투여할 수 있는 여력도 적은 점 등이 원인으로 설명된다.

전제성 교수는 노동운동의 취약성을 위 경제적, 인구적 특성보다 국가정책과 노동운동의 상호작용에서 찾는다. 수하르토의 탄압·포섭 정책 하에서 분산된 노동운동이 형성되었는데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더욱 증폭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포괄적이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허용한 정책은 노동

조합의 난립과 경쟁을 발생시켰다. 또한 민주화 과정에서 정부와 노조가 결사의 자유권 보장과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정책을 교환하여 노동운동은 노조 결성과 활동의 자유를 얻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야기되는 새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민주노총보고서(2003)도 노동조합 결성 자유화는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인 시장경제의 파고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노동자의 생활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세계화에 따른 구조조정과 사유화 등으로 노동자들은 극도의 불안정한 상태에 내몰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탄압의 완화라는 기회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했다. 노조 설립 자유화 이후에 신규노동조합이 출현했지만 실제 조합원 수는 줄어들었다고 한다.

노조운동이 분절화되어 있는 것도 지적된다. 1천개 이상의 노조들이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노조 혹은 지역노조이다. 즉 수하르토 체제 이후 민주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조합이 많이 생겨났지만, 이전의 지역단위 노동운동단체들이 통합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각자 노조를 만들었던 것이다. 전제성 교수에 따르면 이들 단체의 간부들을 비롯한 노동운동가 200여명이 수하르토가 물러난 뒤 석 달 만에 한 곳에 모여 기존의 노조와 구별되는 사회운동 친화적인 전국독립노조를 건설하고자 했다. 그러나 준비 미숙과 진술한 토론의 결핍으로 인해 전국노조건설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각 지역에서 기반을 더 다지고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데 합의하고는 해산했다고 한다. 이에 더해 민주적이고 투쟁적인 노조들도 주요 활동가들의 역사적 차이, 이념 성향이나 정치노선 등에 따라 갈라져 있는 상황이다. 서로 소통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제도화되고 어용화된 노총 이외의 대안적인 노조운동 단위들 사이에 연대와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결론

수하르토가 주도한 공산주의자 대량 학살과 수하르토 독재체제로 인해 어두운 시기를 겪다가 1998년 민주화 이후 자유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조합이 많이 조직되었지만, 수하르토 시기의 단일 어용노총을 위시한 세 개의 노총이 노조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다수의 기업이 해외자본으로 팔려나갔고, 외자 유치의 명목으로 계약직과 외주화가 만연하게 되어서 노동운동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 독립적이고 투쟁적인 노동운동을 지향하는 세력들도 통합된 흐름을 창출하지 못하고 각개약진하고 있는 형국이다.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의 불안정화에 대한 대응, 진보적 노동조합연합체들의 단결 실현이라는 커다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주노조운동의 입장에서는 기존 노총들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면서 독립적이고 투쟁적으로 노조운동을 하고 있는 KASBI나 GSBI와 같은 단위와 연대하고 이들을 지원하면서 인도네시아 내 진보적 노동운동의 연대를 촉진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전제성, 「국가의 온정주의와 노동의 보완적 교섭전략」, 『월간 노동사회』, 2005년 2월호.

전제성, 「수하르토 퇴진이후 인도네시아의 노동운동」, 『현장에서 미래를』, 2001년 8월호.

Badan Pusat Statistik (Statistics Indonesia) [http://dds.bps.go.id/eng/aboutus.php?tabel=1&id\\_subyek=06](http://dds.bps.go.id/eng/aboutus.php?tabel=1&id_subyek=06)

CIA World Fact Book, Indonesia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the-world-factbook/geos/id.html>

Michele Ford, 「Research note: Indonesian trade union developments since the fall of Suharto」, Labor and Management in Development Journal, volume 1, 2000.

KASBI 홈페이지 [kasbi.or.id](http://kasbi.or.id)

GSBI 홈페이지 [infogsbi.blogspot.com](http://infogsbi.blogspot.com)



# 캄보디아

Cambodia

## 국가, 경제 기본 정보

국명: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

인구: 14,805,358(2010년),

종족: 크메르

종교: 94% 불교, 이슬람 3.5%, 기독교 1.5%

언어: 크메르(90%), 베트남어(5%), 중국어(1%), 기타(4%)

GDP(ppp): \$329.5억, 일인당 \$2,300(2011년)

주요 산업: 의류, 농업, 관광

주요 수출 품목: 의류, 쌀, 농산물, 해산물, 수목

노동 인구: 880만 명(2010년); 농업(57.6%), 산업(15.9%), 서비스(26.5%)(2009년)

실업률: 3.5%(2007년)

## 1. 역사와 정치적 환경

캄보디아는 1863년부터 1953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였다. 19세기에 식민지화 당시, 프랑스는 캄보디아의 영토를 나누어 일부를 태국, 일부를 베트남에 넘겼다. 1906년에 태국은 넘겨받은 영토를 다시 프랑스에 할양하였다. 캄보디아 독립운동가는 베트남에 할양한 영토를 되찾을 목표로 베트남과 협조해 독립운동을 벌였지만 결국 캄보디아가 독립을 쟁취했을 때 베트남은 영토를 할양하지 않았다. 분단과 식민지의 역사는 20세기에 펼쳐진 정치적 갈등의 배경이 된다.

식민지 시기 말에 프랑스의 지지 하에서 왕위에 오른 시하누크(Shihanouk)왕은 1954년부터 1955년까지 캄보디아를 입헌 군주제로 통치하였다. 1955년에 정치적 참여를 목표로 아버지에게 왕위를 양도하였고 총리로 선출되었다. 1960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왕자로 다시 국가의 원수가 되었다. 독립 이후 1970년까지 캄보디아의 역사는 상대적 정치적 안정과 경제성장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베트남 전쟁이 심화되면서 캄보디아의 안정도 위협을 받았다. 시하누크는 공식적으로 냉전에서의 중립적인 입장을 발표하였지만 베트남에 양도한 지역을 되찾기 위해서 베트남에 지원을 제공하였다.

1970년 3월 18일에 미국의 지지 · 지원 하에서 론놀 장군이 쿠데타를 조직하여 시하누크를 전복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론놀 장군이 1970년부터 1975년까지 독재로 통치하였는데 이 시기 독재정권에 대

한 불만이 표출되었다. 같은 시기에 미국과 월남의 폭격으로 인해 수많은 캄보디아 국민이 피난민이 되어 도시로 몰려갔다. 크메르루주는 캄보디아 독재와 미국에 대한 심한 반감 속에서 조직되었고 영향을 확대할 수 있었다. 1970년대 초에 캄보디아정부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 강화되었다. 결국 1975년 4월에는 론놀 정권은 크메르루주에 항복하였다.

폴 포트의 주도 하에서 크메르루주는 국명을 민주캄푸치아로 개칭하여 “부당함과 서양, 식민주의, 제국주의 외세의 영향이 없는 새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통치하였다. 1975년~1979년 크메르루주시기의 심각한 탄압과 공포는 잘 알려져 있다. 농업을 기반으로 한 공산주의 유토피아를 구상했던 크메르루주는 시장경제와 화폐를 폐기하고 사회서비스 제도를 철폐하였다. 또한 공동농장을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와 사회를 건설을 선포하여 도시 주민을 지방으로 보내고 공동농장에서 일하도록 강요하였다. 식량이 부족하고 농업 훈련을 받지 못한 수십만 명의 국민이 질환과 기아로 사망하였다. 크메르루주는 또한 지식인을 반역자로 규정해 그와 그들의 가족을 감금, 고문하고 킬링필드에서 집단적으로 처형해 당의 공동묘지에 묻었다. 3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 2백만 명이 기아, 처형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된다. 동시에 캄보디아의 정치, 사회, 경제적 제도가 파괴되었다.

캄보디아 국내를 공포로 통치하면서 크메르루주는 베트남과 전쟁을 벌였다. 1978년에 크메르루주의 베트남국경 침입을 막기 위해서 베트남군이 캄보디아에 침략하였다. 1979년에는 베트남의 지지·지원을 받는 크메르루주파벌인 캄프차 구국민족통일전선(KNUFNS)이 쿠데타를 통해 크메르루주를 쫓아내서 정권을 장악하였다. 쿠데타 세력은 국명을 캄프차민중공화국(PRK)으로 개칭해 1989년까지 통치하였다. 베트남과 관계를 맺은 PRK는 미국으로부터 배제되어 유엔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대신에 크메르루주가 1990년까지 망명정부로 인정되었다. 1990년대 초까지 크메르루주는 국경에서 PRK에 지속적으로 도전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정부는 공산주의 포기를 선언하고 국명을 캄보디아로 개칭하여 정부 통제 하에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였다. 해외원조와 농업을 바탕으로 경제의 재건설을 시도하였다. 1991년에 집권세력이 캄보디아민중당(CPP)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집권당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1986년부터 미국, 일본 등 외국 원조가 캄보디아에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1989년 베트남군이 철수하면서 이 원조는 대폭 확대되었다. 국제원조는 1991년에는 1986년 수준의 3배에 이렀다. 이 시기부터 USAID, 미국노총의 국제연대센터(Solidarity Center) 등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였다.

1991년 유엔 중재로 CPP정권과 크메르루주 세력이 평화협정을 타결하였다. 유엔은 1993년까지 잠정적 통치를 하게 되었다. 1993년에는 민간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는데 CPP가 승리하였다. 새로운 헌법이 입안되어 입헌 군주국(캄보디아 왕국)이 도입되고 시하누크 왕이 복권되었다.

1997년에는 새로운 노동법 시행을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이 캄보디아에 대해 최혜국 자격을 부여받고 투자를 확대하였다. 여러 제품에 대해 관세를 없애 수출을 보장하여 의류 등 수출 산업과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다.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인 1999년에는 캄보디아가 IMF 구조조정을 겪게 되었다. 그 결과로 농촌 지역에서

민영화와 해외 투자가 확대되었고 철거와 이주, 도시화에 이어진다. 이러한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인데 해외이주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4년 시하누크 왕이 퇴위해 아들인 시하모니가 왕이 왕위에 올랐다. 현재 정치에서 왕은 명목상의 최고지도자이다. 캄보디아가 공식적으로 민주화되었지만 집권당이 CPP가 심각한 권위주의적 경향을 지니고 있다. 야당, 시민사회에 대한 위협과 탄압은 아직도 일상적인 일이다. 제일 영향이 있는 야당인 샘랜시당(Sam Rainsy Party)은 상원 123석 중에 26석, 하원 61석 중에 2석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 2. 노동운동사

캄보디아 노동운동의 역사는 다른 주변 국가에 비해 짧다. 1954년~1975년 독립적 왕제 시대와 1975년~1979년 크메르루주시대에 아주 소수의 사업장에서 노조가 존재하였지만 노조활동이 활발하지 않았다. 1979년~1990년 PRK시대에 모든 노조들은 정부 통제 아래에 존재하였다. 1980년에는 정부가 지역단위 노조를 설립하여 노동자들이 가입하도록 명시하였다. 모든 지역단위노조들은 캄프차노조연맹(UFK)이라는 유일한 노총에 가명하였다. 국가의 지침을 노동자에게 전달하고 노동현장의 의제와 문제를 국가에게 전달하는 것이 노조의 핵심 기능이였다. 노조간부들은 정부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았다.

1991년~1993년에 캄보디아가 과도기를 거치면서 시장경제가 도입되었다. 캄보디아의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부는 UFK의 구조와 역할을 수정하였다. 특히 대중적 성격을 강화하고 의류와 섬유 공장, 고무 재배장, 향만 등 시장경제의 핵심 부문에서 사업장단위 노조를 조직하게 하였다.

이 시기에 정부 통제 바깥에서 노조 건설이 시작되었는데 신규노조들은 보통 정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여당이 통제하는 노조에 대응하기 위해서 야당인 크메르국가당(KNP)이 사업장단위노조 설립을 시도하였다. 1996년에 KNP대표인 샘랜시와 노동운동 지도자인 체이비체이(Chae Vichea)가 공산주의 포기 선포 이후에 첫 노조연맹인 캄보디아왕국자유노조연맹(Free Trade Union of Workers of the Kingdom of Cambodia, FTUWKC)을 설립하였고 체이비체이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여당(CPP) 친화적인 의류업연맹인 캄보디아노조연맹(Cambodia Union Federation, CUF)이 같은 해에 결성되었다. 8년 후 2004년에 일어난 체이비체이 살인사건은 노동운동에 큰 충격을 주었다.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되어 2명이 20년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부족한 증거 등으로 판결에 대해 심각한 불신이 표출되었고, 2009년에 이 2명이 풀려났다. 실제 살인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는데 노동운동 내에서는 살인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인정된다.

1993년에 UFK에서 활동하던 로스로크가 민간부문에서의 적극적 조직화를 목표로 UFK에서 탈퇴하여 1999년 의류, 신발, 고무와 향만 등 30개 사업(장)단위 노조를 포괄하는 캄보디아독립노조연맹(Cambodia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CFITU)을 창립하였다. CFITU는 이름과 달리 여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창립 당시인 1999년에는 의류업에서 사업(장)단위 노조 100여 개, 연맹 4개(CFITU,

CUF, FTUWKC, NIFTUC)가 존재하였다.

2000년대에는 사업장단위노조와 노조연맹 조직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노조연맹은 대부분 여당이나 야당과 관계를 맺었지만 일부는 독립 경향을 유지하였다. 1990년대에 시민사회형성과 국가민주화를 도모하는 사회단체가 생겼는데 사회단체활동가는 노동운동민주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독립연맹은 이러한 활동가의 기여로 조직을 확대할 수 있었다. 독립연맹 중에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민주노조연대(Coalition of Cambodian Apparel Workers Democratic Unions, C.CAWDU)가 제일 잘 알려져 있고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C.CAWDU는 NIFTUC의 분열로 인해 2000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사업장단위 지부 45개와 34,000여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고 한다.

2003년에는 여당 CPP와 관련된 연맹들이 뭉쳐 첫 노조총연맹인 캄보디아노조총연맹(Cambod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CTU)를 결성하였다. 이어서 노동운동의 핵심 노조연맹의 주도하에서 2005년에는 여당 친화적인 캄보디아전국노조총연맹(Cambodian National Confederation, CNC,)이, 2006년에는 야당 친화적인 캄보디아노조총연맹(Cambodia Confederation of Unions, CCU)과 독립적인 캄보디아노동총연맹(Cambodian Labor Confederation, CLC)이, 2007년에는 여당 친화적인 캄보디아전국노조연합(National Union Alliance Chamber of Cambodia, NACC)이 창립되었다.

### 3. 경제

1993년 민간선거 이후에 해외 원조가 들어오면서 캄보디아경제가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2001년~2007년 9.7% 평균 성장률이 유지되었다. 2008년 이후에는 6.7%로 떨어졌다. 2004년에 330달러이던 일인당 임금은 2008년까지 2배 인상되어 739달러에 이르렀다. 1993~4년에 45~50%이던 빈곤율은 2007년까지 36%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1990년대 초부터 정부가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민영화와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농촌 주민이 도시로 내몰려 비공식 부문, 저임금 제조와 의류산업에 몰려들고 있다. 최소생계수준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캄보디아 노동자는 해외이주를 택하게 된다. 현재 캄보디아 노동자 약 35만 명이 중동,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등에서 건설, 제조, 농업, 가사 노동자로 일하는 중이다. 가사노동자는 주로 여성이며 말레이시아에 제일 많다. 정보가 부족하고 생계보장이 되지 않는 농촌지역에서는 청소년과 여성의 인신매매 문제가 있다.

캄보디아 노동인구는 약 880만 명이며 15세 이상 노동인구는 약 780만 명이다. 대부분은 교육과 기술 수준이 낮다. 초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노동자는 23%에 불과하다. 실업률이 낮은 편이지만 30~40%은 불안정 고용에 시달리고 있다.

농업은 아직까지 캄보디아사회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경제에서의 그 비중이 축소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농업 고용인구는 전체고용인구 59.1%에서 55.0%로 감소하였다. 2009년에는 농업인구가 전체 인구의 84%, 고용인구의 55%였지만 농업생산은 GDP에서 불과

31.6%만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지난 20년 동안 건설, 의류와 관광 산업들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특히 의류산업은 캄보디아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 되었다. 1995년과 2007년 사이에 의류 수출액은 2700만 달러에서 27억 달러로 상승하였다. 2001년과 2006년 사이에 섬유, 의류와 신발은 제조업 성장의 89%와 제조업 전체의 76%를 차지하였다. 관광도 같은 시기에 10%~20% 성장하였다.

〈표1〉 캄보디아 기본지표(2005년~2009년)

지 표	단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실질 GDP성장	%/ \$백만	13.3, 5,502	10.8, 6,099	10.2, 6,719	6.0, 7,122	5.1, 7,482
부 문	농업	30.7	30.1	29.7	31.7	31.7
	산업	25.0	26.2	24.9	23.8	23.6
	서비스	39.1	38.7	38.5	37.5	37.7
인 구	1인	13,806,923	14,080,653	14,363,519	14,655,950	14,957,752
여 성	1인	7,041,531	7,181,133	7,325,395	7,474,535	7,628,454
남 성	1인	6,765,392	6,899,520	7,038,124	7,181,416	7,329,298
고용인구	1인	7,869,946	8,025,972	8,187,206	8,353,892	8,525,919
농 업	1일	4,651,138	4,603,498	4,497,757	4,427,562	4,689,255
산 업	1인	637,206	1,165,077	1,261,163	1,336,623	1,278,888
서 비 스	1인	2,164,235	2,257,398	2,428,285	2,589,706	2,557,776
농 업	% 고용	59.1	57.4	54.9	53.0	55.0
산 업	% 고용	8.1	14.5	15.4	16.0	15.0
서 비 스	% 고용	27.5	28.1	29.7	31.0	30.0

## 의류산업

대부분의 의류공장은 싱가포르, 홍콩, 중국, 한국 등 외국인투자자들이 소유하고 있다. 캄보디아로 진출한 대표적인 한국기업은 한솔섬유, 월비스이다. 캄보디아 의류산업은 Gap, H&M, Puma, Addidas, 월마트 등 초국적 브랜드를 위해서 OEM(주문자 상표에 의한 제품 생산자)으로 생산하여 수출한다. 공식적으로 수출 허락을 받으려면 ILO의 '보다 나은 캄보디아공장' (Better Factories Cambodia) 프로그램이 정하는 최소 노동기준에 맞춰야 하지만, 사실상 위반이 많다. 많은 의류업자들이 ILO의 감시를 아예 피하기 위해서 단기계약직을 고용하고 하청업체를 사용한다. 무한계약직(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월 61달러의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되는데 단기계약직노동자는 연수생으로 분류되어 월 56 달러의 최저임금 기준이 적용된다.

의류산업은 현재 노조 성장의 핵심 축이기도 하다. 현재 의류노조연맹은 40여 개, 사업장단위 노조는 2000여개가 존재한다. 2005년과 2009년 사이에 395건의 파업이 의류산업에서 발생하였다.

## 4. 노동법제도

캄보디아의 노동법제도는 주변 국가에 비해 노동자에게 유리한 편이다. 이는 국제기구의 깊은 개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유엔이 중재한 1991년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캄보디아는 6개의 핵심인권협약과 여러 ILO협약을 비준하여 노동법제에 반영시켰다. 노사제도는 지난 20년 동안 형성되어 상대적으로 현대화되어 있다.

1993년 입법된 헌법은 노동자에게 노조 결성과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과 파업 등 평화시위권을 보장하였다. 1997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노동법(Labor Code)은 노동3권을 자세히 규정하고 노동쟁의 중재제도를 설치하였다. 미국~아시아자유노동기관(Solidarity Center 선임조직)과 ILO가 노동법 입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미국노총의 압박 하에서 미국은 노동법 통과를 1999년 미국-캄보디아 무역협정의 전제 조건으로 하였다. 노동법은 공무원, 판사, 경찰, 군인, 조종사, 선장 외에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 노조 설립

법적으로 캄보디아의 노조설립절차는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실제 노조설립을 가로막는 요인이 많다. 임원선거를 통해 사업장단위노조를 창립할 수 있는데, 노조임원 선출권은 해당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전과가 없으며 25살 이상인 자에 국한된다. 노조 창립자는 창립선거 계획을 사용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거 후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할 때 불인정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 사용자 승인을 받았을 때 임원 후보는 선거 45일 전과 45일 후까지 해고에 대한 법적 보장을 받게 된다. 하지만 창립선거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 선거계획이 사용자에게 통보됐을 때 조직대상인 노동자들에 대해 회유 · 위협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노조설립을 희망하는 노동자는 이러한 회유와 위협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다.

### 단체교섭

노동법은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며 사용자의 교섭대표(단일노조인 경우)나 다수교섭대표(복수노조인 경우) 자격이 있는 노조와 교섭할 의무를 명시한다. 단일노조인 경우 교섭대표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 해당노조가 노동직업훈련부(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사용자, 노동자문위원회(Labor Advisory Committee)나 관련 제3자가 반대하면 교섭대표 자격이 부정될 수 있다.

복수노조인 경우 복수노조 중에 조합원이 가장 많은 노조가 다수교섭대표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역시 사용자, 노동자문위원회나 제3자가 반대하면 다수교섭대표 자격이 부정될 수 있다.

권리의식이 상당히 높은 의류업의 경우 대부분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단체교섭이 체결된 사업장은 소수이다. 단협을 체결하지 못하더라도 때로 노동자의 투쟁으로 노동조건 개선하는 데에 성공하기도 한다.

전반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아직까지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3년에 노동부에 등록된 단협은 불과 20건이었다. 2009년에는 131건으로 증가하였다. 체결된 단체협정의 수준과 포괄성도 불균등하다. 대부분은 단일 이슈에 관한 협정 수준을 넘지 못한다. 현재 정식 단체협약은 30여개밖에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2〉 체결단체협약 건수

연 도	2003년~2004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합계
등록 단협	45개	19개	11개	131개	206개

### 파업과 중재

노동쟁의가 발생할 때 해당노조가 조정 · 중재의 모든 절차를 수행해야 합법파업이 가능해진다. 노동부 근로감독이 실시한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며, 15일 안에 조정이 실패 하면 사건이 노사정 중재위원회에 넘어간다. 다시 15일 안에 중재가 성공하지 않으면 합법파업이 가능해진다. 쟁의를 제기한 노조가 등록되어있는 5개 노총 중 하나에 가맹되어야 중재 결정이 구속력을 가진다.

조정 · 중재 절차는 복잡하고 최소 1달이 걸려 대부분의 파업이 합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특히 긴 조정 · 중재 과정 동안 사용자가 탄압에 나설 기회가 많고 조건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어 많은 노조는 불법파업을 택한다. 파업을 탄압하기 위해서 공권력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파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노동관계법 논란	
<p>캄보디아 법제도에는 노동관계법이 없다. 현행 노동법은 노조설립, 단체교섭, 파업에 관련한 위와 같은 규정을 포함하고 조정 · 중재 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여러 한계가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운동조직들은 법보다 정부와 자본의 횡포를 문제로 보고 노동관계법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나 2010년부터 정부가 노동관계법 입법을 추진하였고, 애초에 제안된 노동관계법은 폭력파업, 파업 시 업무방해 등을 중죄로 규정하고 설립신고 절차를 더 까다롭게 한 안이었다. 노동부에 노조자격을 자의적으로 박탈할 권한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정부가 법안을 2011년</p>	<p>말에 통과시킬 것을 계획하였지만 5개 노총의 반발로 실패하였고 내용 수정을 수용하였다. 개정 노동관계법에는 노조 탄압을 보다 쉽게 만든 대부분의 조항이 삭제되었다. 비공식노동자에게 노조설립권을 부여하기도 하여 대부분의 노조는 새 법안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CLC는 공무원 노조설립 금지 등 여러 조항이 아직 탄압적인 요소가 남아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를 둘러싼 갈등과 노동관계법 시행이 장기적으로 노동운동에 미치는 영향은 지켜봐야 될 문제이다.</p>

### 최저임금

노동부는 노동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여 부문별 최저임금을 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많은 부문에 최저임금 기준이 없다. 의류산업의 경우 2000년에 노동부가 월 45달러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정했다. 2006

년에는 월 50달러로 인상되었고 2010년에 다시 월 61달러로 인상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수생으로 간주된 단기계약직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은 월 56달러로, 정규직보다 낮다. 현재 기준은 2014년까지 유효하다.

## 5. 노동운동현황

노조 조직률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유사하게 아주 낮은 것으로 보인다. 노조 조직률은 전체 노동인구의 1%, 산업노동인구의 13%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조직노동자는 의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각 산업별 조직률을 보면, 의류산업 조직률은 60%(전체 노동자 294,470 명), 고무와 담배산업은 25%(전체 노동자 309,000 명), 건설산업 5%(전체 노동자 100,000여 명), 관광산업 0.06%(전체 노동자 666,600여 명), 공무원 5%(전체 노동자 150,000여 명), 맥주판매 5%(전체 노동자 30,000여 명), 툭툭(오토바이로 만들어진 대중교통 운전사) 30%(전체 노동자 10,000여 명)으로 추정된다.

캄보디아 노동운동은 역사가 짧은 만큼 아직 체계화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현장과의 소통과 조합원교육이 잘 되지 못하고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건개선이 안착되지 못했다. 또한 전 시기에 정부가 주도한 어용노조지도자들이 아직도 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직을 차지하고 있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한 조직이 많다. 여당인 CPP가 실제로 많은 노총과 연맹을 통제하고 있어 노동자들이 노조지도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노조간부 매수, 해고, 위협, 소송 등 사용자의 다양한 노조 탄압전술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노동운동은 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한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 캄보디아 노동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률이 높은 의류산업의 경우 한 사업장에 4개 이상의 노조가 존재하는 것이 흔한 현상이다. 이 현상은 여러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정당, 특히 집권당과의 관계를 맺는 노동운동지도자가 정치적 지지의 대가로 여러 경제적 기회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노조를 건설하고 출마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념적으로 여당, 야당과 독립노조운동을 지향하는 노동운동지도자가 같은 사업장에서 자신의 지향에 따른 노조 건설을 시도할 때도 많다. 또한 노조운동 경험이 짧아 장기적인 운동발전 전략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노조지도자는 자신이 당선되지 않거나 현재의 노조 활동방향에 동의하지 않을 때 탈퇴해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경향이 있다. 해외조직의 캄보디아시민사회에 대한 개입도 노조확산과 무관하지 않다. 국제 산별노조와 NGO가 캄보디아 노조를 선별적으로 지원하는데 재정적 지원을 확보하는 경쟁은 노조 분열과 경쟁적인 건설에 이어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캄보디아노동운동의 통합성과 단결력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노동부에 등록된 노총이 총 5개이며 대체로 서로 경쟁적인 관계이다. 5개 노총 중에 CCTU가 정부와의 관계가 가장 긴밀하며 노동자의 투쟁을 가로막는 기능을 한다. NACC와 CNC도 여당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산하 연맹이 건전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CNC 산하 의류연맹 NIFTUC는 2010년에 생활임금 요구를 걸면서 C.CAWDU와 함께 의류노동자의 총파업을 조직하였다. CCU와 NACC는 야당과 관계를 유

지하고 있으며 때로는 어용노조, 때로는 민주노조의 성격을 보인다. C.CAWDU 주도 하에서 건설된 CLC가 유일한 민주노조 총연맹인 셈인데 심각한 정부 탄압에 처해 있다.

CLC는 2006년에 설립되었고 2008년에 노동부에 등록되었다. 현재 7개 가맹 조직 (C.CAWDU, 관광서비스연맹(CTSWF), 비공식부문연맹(IDEA), 공무원협의회(CICA), 농업연맹(FAPD), 식품서비스연맹(CFSWF), 건설부연맹(BWTUC)을 포함하며 61,754명의 조합원을 표방한다. 법에 의한 지배(rule of law), 인권, 민주주의, 남녀평등과 양질의 생활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 노동운동단결, 캄보디아사회민주화, 사회·경제적 연구와 교육, 정부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자 이해 대변과 남녀평등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부문에서의 조직률 증가, 교섭력 강화, 조합원의 노동조건 개선, 국내외 대표성 강화, 여성지도부 비율 증가, 국제연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정하고 있다.

2010년에 노총에 가맹되지 않은 5개의 노조연맹이 모여 캄보디아전국노조총연맹(National Labor Confederation of Cambodia, NLC)이라는 새로운 노총을 창립하였다. NLC는 독립성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활동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표3〉 캄보디아 노총 현황(2012 현재)

조직명	창립연도	가맹연맹 수	창립과 핵심 연맹	비고
Cambodia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CCTU)	2003년	10여 개	창립연맹: CFITU(고무, 항만) 핵심연맹: CUF(의류)	어용, 깡패와 관계, 국제노총 가맹
Cambodian National Confederation (CNC)	2005년	5여 개	창립연맹: NIFTUC(의류)	어용; NIFTUC 2010년 의류노동자 총파업 참여
Cambodia Confederation of Unions (CCU)	2006년	2개	창립연맹: FTUWC(의류)	야당과 관계 유지, 독립한 편
Cambodian Labor Confederation (CLC)	2006년	비공식노동자 조직을 포함해 대여섯개	창립연맹: C.CAWDU(의류) 핵심연맹: CTS(관광)	독립, 2010년 의류노동자 총파업 참여
National Union Alliance Chamber of Cambodia (NACC)	2006년	15여개	창립연맹: CLUF(의류)	여당, 부총리 등과의 관계, 제일 큰 노총, 국제노총 가맹
National Labor Confederation of Cambodia (NLC)	2010년	5개	n/a	독립표방, 실제 확인 안됨

노총에 가맹하지 않은 수많은 무소속 노조연맹과 사업장단위노조들이 존재한다. 캄보디아 노동부통계가 포괄적이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지난 5~10년 동안 새로 설립된 비가맹노조는 캄보디아의 상대적으로 쉬운 노조설립 절차와 노동자의 기존 노총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다. 캄보디아의 노동법 하에서는 2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사업장단위에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노동운동 경험은 비교적 적지만 민주화 이후에 권리 인식이 높아진 많은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노조건설에 열정적이며 조직률이 낮아 단체교섭을 못하거나 사측으로부터 탄압을 당해도 노조활동에 끈기를 보인다. 또한 대부분의 노총은 정부나 정당과 관계를 맺고 있고 사업장문제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

은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가맹하지 않을 것을 선택한다. 노동쟁의 중재에 있어서 해당 노조가 노총에 가입되어 있어야 중재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는 상황에서 많은 노조들이 가맹하지 않는 것에서 노동자들의 노총에 대한 불신의 깊이를 볼 수 있다.

공식노동조합 외에도 노동운동을 지원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여러 NGO와 사회단체가 존재한다. 이 중에 특히 2개 조직이 언급될 필요가 있다. 먼저, 캄보디아법률교육센터(Cambodia Legal Education Center, CLEC)이다. CLEC는 1996년에 USAID와 계약한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2001년까지 샌프란시스코주립대학 법대의 부서로 운영되었다가 2001년에 캄보디아 정부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하여 이후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CLEC의 활동은 주로 농촌 토지에 대한 권리, 노동기본권, 정부비리부패 제거와 법적절차 도입으로 나누어져 있다. 앞의 두 가지 의제가 활동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노동권에 관련해서는 노조에 대한 법적지원, 언론사업 지원, 노동법 등 교육과 법제도 개선 투쟁을 하고 있다. CLEC가 노동운동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만큼 CLC와 관계가 제일 깊지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모든 노총에 열려 있고 노동운동의 모든 핵심 의제에 관련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CLEC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해외 이주 과정의 여러 지점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발 사업으로 인한 농촌지역 철거와 의류산업 등 수출산업의 낮은 최저임금, 열악한 노동조건은 해외이주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CLEC는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철거에 맞서 싸우는 농민에게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개발사업 정책 개선에 관한 로비활동을 한다. 농촌지역에서 쫓겨나 의류산업에서 일하게 된 노동자도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해외이주를 선택하게 되는데 CLEC는 노조들과 함께 의류산업 노동기본권과 생활임금 쟁취 투쟁을 추진 중이다. 해외에 이주한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말레이시아 이주노동자 문제에 관한 NGO 테나가니타(Tenaganita)와 관계를 맺어 조사, 상담, 고충처리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또한 인신매매나 심각한 학대를 당한 여성, 아동 이주노동자를 캄보디아에 송환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캄보디아 노총들이 해외이주문제에 관련해서 아직까지 많은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송출 · 유입국의 국제연대를 고민하는 민주노총과 한국이주노동진영은 CLEC의 활동에 관심에 기울이면 좋을 것이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조직은 노동자정보센터(Workers Information Center, WIC)이다. 캄보디아 노동운동의 핵심 산업인 의류산업은 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이며 조합원도 대부분 여성이다. 그러나 노조간부들은 대부분 남성이다. WIC는 이러한 젠더 불균등을 개선하고 여성노동자의 주체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WIC는 주로 3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여성노동자 상담이다. 여성노동자들이 체불임금, 노동기준 위반, 성희롱 등을 당했을 때 멀리 가지 않으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6개 지역에서 드롭-인(예약 없이 들를 수 있는)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두 번째가 여성노동권, 건강권에 관련한 교육이다. 교육은 드롭인센터를 통해서 접촉한 여성노동자 대상으로 진행한다. 여성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키우는 것뿐 아니라 노조간부로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장기적인 목표이다.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WIC회원과 활동가를 모집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사업이다. 노동자 수, 노동조건, 생산 브

랜드(주요 구매자 파악), 생산량 등 각 의류공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한다. 캄보디아노동운동이 브랜드들의 공급사슬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브랜드에 대해 압박전략을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는 만큼 WIC의 조사내용이 중요한 지원이 될 것이다. 젊은 여성 활동가를 육성하는 WIC는 노동운동의 장기적인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의류노동자 총파업	
<p>2010년부터 캄보디아 의류노동자는 새로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통풍이 나쁘고 더위가 심각한 의류공장 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집단적으로 기절한 사건 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2010년 6월부터 16개 공장 에서 집단기절 사건 34건이 발생하였다. 전체적으로 의류노동자 2400여 명이 쓰러져 병원에 실려 갔다. 100~200명이 한꺼번에 쓰러진 사건이 여러 번 기록되었다.</p> <p>정부가 실시한 조사는 집단기절을 일으킬 만한 심각한 문제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되었으나, 전문가들은 여러 원인을 지적한다. 의류노동자는 보통 점심시간이 짧고 쉬는 시간이 따로 보장되지 않아 피로가 쉽게 쌓일 수 있다고 말한다.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서 더 그럴기도 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영양 부족이다. 기본임금이 월 56달러나 61달러밖에 못 받는 의류노동자는 빛을 내서 생활할 때가 많은데 돈을 아끼기 위해 영양과 칼로리가 낮은 값싼 국과 밥을 사서 식사를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물가가 상승하여 실질임금이 하락해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들은 최소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는 의류산업의 최저임금 인상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한다.</p> <p>CLC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2010년에 생활임금 투쟁에 나섰다. 첫 단계로 최소생활기준을 보장할</p>	<p>수 있는 임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의류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를 바탕으로 93달러를 최저임금 요구로 결정하여 서명운동을 추진하였다. 짧은 시일 내에 6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CLC는 CNC 가맹 NIFTUC와 함께 총파업을 선포하고, 9월 13일에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파업 첫 날에 조합원과 미조합원 63,000명이 길거리에 나섰는데 파업이 끝난 9월 16일에는 파업노동자가 20만 명에 이르렀다. 불안한 ILOBFC는 파업을 빨리 마무리시키기 위해서 중재에 나서 정부와 사용자로부터 노조의 의의를 약속받았다. 그러나 파업노동자가 현장에 돌아가자 817명이 해고통지를 받았다. 1년 반 동안의 법적인 투쟁 끝에 대부분의 노동자가 현장에 복귀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100명 이상이 현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현장 미복귀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노조간부이다.</p> <p>2010년에 단호한 투쟁을 벌였지만, 의류노동자는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쟁취하지 못했다. 그러나 의류산업의 텅없는 노동조건을 이슈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사회적 압박 속에서 2012년에 캄보디아 정부는 5달러 복지수당 인상을 결정하였다. CLC를 비롯해 노동운동진영은 2012년 하반기에 생활임금 투쟁에 다시 나설 것을 준비 중이다.</p>

## 6. 결론

크메르루주 시절의 트라우마가 아직 사라지지 않은 캄보디아에서 진정한 사회주의경향 노조나 단체는 찾기 어렵다. 집권당인 CPP가 공산주의를 배경으로 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산주의를 공식적으로 포기였다. 보다 중요하게 평가 받아야 될 것은 CPP의 심각한 표현의 자유 제한과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분명히 CPP는 진정한 사회주의 정당과 멀다. CPP와 관계를 맺는 노총들이 포괄하는 일부 산하조직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싸우며 건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총지도부는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보다 노동자를 회유하며 정부로부터 혜택을 따내는 것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캄보디아의 역사 · 정치적 환경 속에서 CLC와 같은 독립(민주)노조가 이념이나 근본적인 사회변화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으면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 노동운동 민주화와 강화를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사유화 반대, 이주노동자의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 생활임금 등을 주장하는 CLEC와 같은 시민사회 단체들은 미국 원조나 국제 NGO의 지원을 받아 출발하였고 미국 주도의 자유민주주의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LC나 CLEC는 캄보디아의 사회진보에 있어서 선봉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캄보디아 노동운동에 대해서 엄격한 원칙적인 입장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삶을 진정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노조와 단체와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 · 사회 · 정치적인 맥락에 대해 배우고 정보와 교훈을 교류해나가야 한다.

### 참고자료

C.CADWU 사이트, <http://ccawdu.typepad.com/website/>

CLC 사이트, <http://clccambodia.org/>

CLEC 사이트, <http://www.clec.org.kh/>

Veasna Nuan and Melisa Serrano, Building Unions in Cambodia: History, Challenges, Strategies (Friedrich Ebert Stiftung, 2010).



# 태국

Thailand

## 국가, 경제 기본 정보

국명: 타이왕국

인구: 6,810만 명

종족: 타이(77%), 중국(13%), 말레이(3%), 부족 집단(7%), 이주노동자 200~300만 명(80% 버마)

종교: 불교(95%), 이슬람교(4%), 기타(1%)

언어: 타이어

1인당 GDP: \$9,187 (2010)

GDP 성장률: 8% (2010)

주요 수출국/수출 품목: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말레이시아 / 컴퓨터, 트랜지스터, 해산물, 의류, 쌀

주요 수입국/수입 품목: 일본, 미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 자본재, 중간재, 원자재, 천연자원, 소비재, 원료

한국에 수출: 사료, 고무, 컴퓨터 부품 등

한국에서 수입: 엔진 부품, 철강, 비료, 섬유류, 화학제품 등

노동인구: 3,680만 명 - 농업: 40.7%, (2007년), 공업: 13.2%, 서비스: 46.1% (2011년)

실업률: 1.2% (2010년)

## 1. 역사와 정치적 환경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의 식민지배 경험이 없는 나라다. 태국의 통치자들은 프랑스와 영국의 경쟁관계를 이용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와 대영 제국의 동남아시아 식민지 사이의 완충지로서 태국의 독립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양 제국주의의 압박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다. 제국주의가 한창이던 때 결국 메콩 강 동쪽 영토를 프랑스에, 말레이 반도를 영국에 내주게 되었다.

전제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1932년 6월 24일 인민당(Khana Ratsadon)이라 자칭하는 군인과 관료집단이 무혈 쿠데타를 일으킨 후, 프라자드히폭 왕이 입헌군주제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1932년 12월 10일 태국의 첫 헌법이 공포되었다.

1932년부터 현재까지 태국에는 19번의 군부 쿠데타가 있었다. 잦은 정권교체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면서 위계질서에 기초한 권위적인 정치문화가 정착되었다.

1941년 일본이 침략하자 태국정부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일본군의 통행을 허용했다. 다음 해에는 프랑스와 영국에 할양한 영토를 탈환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미국과 영국에 전쟁을 선포했다. 또한 일본의 버마 침략을 지원하기 위해 태국-버마철도(일명 죽음의 철도)를 건설했는데, 아시아인 노동자 20만 명, 서양인 전쟁 포로 6만 명이 투입되었고 이 중 아시아인 9만 명, 전쟁 포로 1만6천 명이 숨졌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47년에는 다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친미세력이 정권을 장악했다. 새 정부는 밖으로 미국 등 서구 강대국들과 동맹을 맺는 한편 안으로는 반공 정책을 추진하였다. 미국의 지속적인 지원 아래 태국 내 반공 세력들이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 미국과 세계은행의 지도에 따라 자유경제 정책들도 도입되었다. 태국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집중하면서 민간산업과 상업, 서비스산업이 성장한 반면 농업은 방치되었다. 1960년대부터 농촌인구가 도시로 몰려들어 외국인투자가 주도하는 제조업 등의 노동 시장으로 유입되었다.

사회적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1942년에 창당된 태국공산당(Thai Communist Party of Siam 또는 CPT)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CPT의 지지층은 1940~50년대만 해도 방콕의 지식인들에 국한됐지만, 세계 냉전질서 안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과 태국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정책을 내세우면서 1960년대에는 노동자층과 도시 거주민들한테서도 많은 지지를 얻었다. 마오주의를 표방하고 중소분열 정국에서 중국에 대한 지지를 천명한 태국공산당은 1960년대 후반부터 무장 게릴라 투쟁에 돌입하였다. 1970년대에는 많은 학생들과 지식인들이 CPT에 가입하여 당의 태국인민해방군에 복무하였다. 이 시기에 CPT는 사회당 등 변혁세력들과 함께 '민주노선'을 건설하여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CPT의 활동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태국 민주화운동이 1970년대 초부터 활발히 전개되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운동세력이 1972년에 군사정권을 전복하는 데에 성공하여 태국에는 1976년까지 민주 체제가 이어졌다. 정권을 전복시킨 학생활동가들은 농촌 지역으로 투신하여 농민운동을 활성화시켰다. 잘 알려진 빈민회의(Assembly of the Poor) 결성이 그 성과 중의 하나다. 빈민회의는 90년대까지 태국 사회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다.

아쉽게도 민주 체제는 오래가지 못했다. 1977년에 군사 쿠데타(크리앙삭의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엄령이 1981년까지 계속되었다. 1970년대 말부터 군사정권이 CPT 소탕에 나서면서 CPT는 어려운 투쟁을 전개하며 많은 타격을 입었다. 지지기반인 노동계급과 활동현장인 도시지역을 등지고 입산을 결정했던 CPT의 선택과 이후 민간인 테러와 같은 전술 등은 대중과의 괴리를 야기한 역사적 오류로 평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당시 대규모로 형성되고 있던 노동자계급의 급진화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평가도 있다.

1990년대에도 잦은 정권 교체와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 1991년 2월에 수친다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킨 후 민주주의가 퇴보하면서 사회운동 탄압이 심해졌다. 1991년부터 1997년에 아시아금융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8번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 1997년 11월에 차왈릿 용차이웃 총리가 경제위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한 후, 중국인 이민자 3세대인 추안 립파이가 총리로 선출되었다. 2001년에 4년 임기를 끝낸 추안

랏파이 총리는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위협을 느낀 국민자본은 자신들의 이해를 보호하기 위해 정권을 장악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미디어산업의 거물인 탁신 친나왓을 총리로 앉혔다.

탁신은 자본의 대표였지만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서민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 여러 포퓰리즘 정책들을 공약했는데, 당선된 후 일부 정책들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탁신의 '타이 락 타이' 당은 모든 자유선거에서 승리했다.

탁신은 노동계가 요구한 일자리 창출과 실업 해소, ILO 협약 비준도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대신에 노동계를 회유하기 위해 실업기금 정책을 발표하고 산업재해 처리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안전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질서를 바로잡는다는 구실로 언론의 정권 비판을 금지하면서 대중매체를 통제하였다. 이러한 정책들이 우회적으로 노조운동을 약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탁신은 국제자본과 전통적인 국내 엘리트층(국민자본, 귀족, 관료, 군인), 가난한 서민들 사이에서 타협을 시도했는데,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정당화하고 사회적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전통적인 엘리트들을 소외시켰다. 군주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수적 도시 중산층들은 탁신의 조세정책을 비판하면서 조세정책의 혜택을 받는 농촌 빈민층에 대한 경멸을 노골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탁신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자 선진부문을 장악한 자본은 이익을 보았지만 국민자본은 다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탁신을 지지하던 시민사회도 탁신이 당선된 후 시행한 사유화 정책들과 권위주의적인 경향을 격렬히 규탄하였다.

결국 2006년 9월에 탁신에 실망한 군인집단이 탁신정권을 전복해 타이 락 타이당을 해체시키고 임시 헌법을 발표하였다. 쿠데타 직후 탁신은 망명하였고 신 군사정권은 부정부패, 언론통제 등의 다양한 혐의로 그를 기소하였다. 2007년에 실시된 자유선거에서는 탁신 지지자인 사막 순다라벳이 총리로 당선되었다.

탁신에 대한 입장 차이는 노란셔츠와 붉은셔츠 간의 갈등으로 발전하였다. 군주제와 계급적 전통사회를 유지하고자 하는 엘리트 계층과 사유화와 독재를 비판하던 노조, 시민사회단체의 일부가 반탁신 노란셔츠 진영에 참여하였다. 반면에 친탁신 세력인 붉은셔츠 진영은 선진자본과 농촌 중상층, 농촌빈민과 도시 빈민들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이후 양쪽은 종종 폭력적인 시위를 벌이며 정치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왔다. 2011년 6월 총선에서 탁신의 여동생인 잉락 친나왓의 프어 타이당이 승리하여 국회 의석의 대다수를 차지했고 잉락 친나왓은 태국의 총리가 되었다.

앞으로도 귀족 엘리트 집단은 노란셔츠 노선을 통해서 수직적인 전통 사회구조의 유지를 계속 주장하겠지만, 탁신의 등장이 사회적인 변화를 불러온 것은 분명하다. 탁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채택한 '자유선거 실시' 라는 전략은 일반인의 정치참여와 권리의식을 자극하였고, 전통적인 사회구조로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사회 전반을 뒤흔들었다. 결과적으로 태국은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노란셔츠와 붉은셔츠 간의 갈등은 사회운동 내에서도 계속 분열을 일으키겠지만, 노동권과 사회권을 주장할 공간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 2. 노동운동사

태국노동운동은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는 공공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노동자조직을 만들어 활동하였으며, 1932년의 군부 쿠데타와 입헌군주제 수립에 이 노동자조직들이 가담하면서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민간정권과 군사정권이 교체되는 것에 따라 노동탄압이 심해지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했다. 노동탄압 정책과 노조 포섭, 회유 정책이 번갈아 시행되면서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과 함께 태국 노동운동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왔다.

일본 점령 시기(1942년-1945년)에 노조 활동이 거의 사라졌다가 전쟁 이후에 수립된 민간정부가 노조활동을 허용하면서 다시 발전할 기회를 얻었다. 이 시기에 태국 노동인구의 다수를 차지했던 중국 이민노동자들이 중앙노동조합(Central Labor Union)이라는, 중국공산당과 연계된 연맹조직을 결성하였다.

1950년대에는 정부가 중앙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의 타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태국노동조합(Thai Labour Union)을 만들고 노동자들에 대한 포섭을 시도하였다. 1958년 쿠데타 후에 사릿(Sarit) 군부정권이 온정주의적인 조합주의 정책을 채택하여 '노조와 같이 대립적인 성격의 조직은 태국의 고유 문화에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노조를 불법화하였다. 사기업 노조를 심하게 탄압하며 어용 노동자조직을 통해서 공기업노동자들을 포섭하려 했다. 사릿 정권의 정책에 따라 사기업노조들이 약화되고 공기업조직이 강화되었다.

1960년대 산업화 시기에는 태국인 노동인구가 중국인보다 빨리 늘어나면서 중국인 노조의 영향력이 약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학생활동가들이 노동운동의 민주화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공기업노조에 진출하거나 연대하여 노조 내 민주화를 도모하였다. 학생들의 영향으로 공기업노조가 급진화되어 여러 파업을 주도하였다. 짧은 민주주의 통치 하에서 1975년에 노동관계법이 통과되고 65개 사업(장)단위노조들이 모여 노총인 태국노동협의회(Labor Council of Thailand, LCT; 몇 년 후에 Labor Congress of Thailand로 개칭)를 결성하였다. 1970년대 중반에는 LCT가 태국 노조의 50%와 조직노동자의 80%를 포괄하였다.

1977년 크리앙삭의 쿠데타 후 계엄령이 내려지면서 모든 파업이 금지되고 노동운동은 다시 심각한 탄압에 처하게 되었다. 1978년에는 군부정권이 LCT를 무력화하기 위해 어용노총인 태국자유노동조합연합(National Free Labour Union Congress)을 만들었다.

1980년대 수출지향 성장정책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자본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사유화를 추진하였다. 전 시기에 노동귀족 또는 어용노조로 알려졌던 공기업노조들은 사유화 반대 투쟁을 전개하면서 강경노선

을 취하고 전투성을 강화하였다.

1982년에 내부 갈등으로 LCT가 분열하여 새로운 태국노동연합(Thai Trade Union Congress, TTUC)이 결성되었다. 노조 지도자들이 노동운동 내에서의 정치적인 영향력을 놓고 대립하면서 민간부문에서는 새로운 노총이 계속 생겨나고 노조 숫자도 늘어났지만, 노동자 조직률은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12개의 민간부문 노총이 존재하지만 노동자 조직률은 불과 3.74%에 불과하다.

1991년 쿠데타 후 수친다 정권은 공기업노조를 불법화시켰다. 기존의 공기업노조들을 노동협회로 전환하고 별도의 공기업노동관계법 (State Enterprise Labor Relations Act, SELRA)으로 통제하였다. 공기업노동관계법은 공공부문에서의 파업을 불법화하고 공공부문 노조와 사기업 노조의 공동 노총 결성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 태국의 노조 가입자 수가 338,000명(2.5%)에서 152,000명으로 급락하였다. 또한 수친다 정권은 공무원과 가사노동자, 농업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며 이에 저항한 LCT 위원장을 납치하는 등 노조활동을 심각하게 탄압하였다.

1992년에 공기업노조들이 참여한 시민투쟁으로 선거민주주의가 부활하였다. 민간정권 하에서 새로운 헌법이 입안되었고 1997년에 시행되었다.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이 법적인 보장을 받게 되었다. 2000년에는 공기업노조가 다시 합법화되었지만 공무원과 가사노동자, 농업노동자는 여전히 노조를 결성할 수 없었으며 공기업노조와 사기업노조의 공동 노총 결성도 여전히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1997년 경제위기로 제조 부문에서 대량 해고가 발생하였는데 노동운동 측은 이에 대응하여 수차례 파업을 벌였다. 특히 여성노동자들이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파업이 경제위기를 악화시킨다는 악선전을 하면서 탄압에 나섰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해 결국 파업노동자들은 패배하였고, 이후 파업의 실패가 노조활동의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2001년 선거에서 노조들은 대체로 탄신을 지지하였지만 당선된 타이 략 타이 당 정권은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노동3권을 부정하였다. 정권의 독재적 경향을 비판하면서 공기업노조연맹을 비롯해 많은 노조들이 노란셔츠 진영에 참여하였다. 2006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일부 노조가 군부세력을 지지하여 노동운동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부채질하였다. 노란셔츠 진영에 참여하는 노조는 지금도 태국 시민사회와 좌파진영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 3. 경제적 환경

1950년대에 친미세력이 등장한 이후 태국은 60년대부터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공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화를 추진하였다. 70년대에는 베트남전쟁 종결로 인한 전쟁특수의 급격한 감소와 오일쇼크로 인해 80년대 초까지 경제위기를 겪게 되었다.

80년대까지도 일차산업 생산품의 수출이 태국경제의 근간을 이루었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가 공업화와 수출주도 개발정책을 도입하자 80년대부터 90년대 중반까지 태국은 고속 성장을 경험하였다. 1985년 플라자협정 이후 일본자본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유입되면서 태국의 성장은 가속화되었고, 제조업 생산품이 일차산업보다 큰 수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일차산업, 노동집약적 산업에 집중되었던 산업구조가 중화학 하이테크 산업 쪽으로 중심을 이동하게 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러시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외국계 자본은 합작 형태로 태국의 여러 신경제 부문에 진출하였다.

1980년대 말부터 태국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본과 금융 자유화를 시행하고 자본의 원활한 유입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채택하였다. 급속한 경제구조 변화 속에서 태국은 높은 경제성장률(7~8%)을 유지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촌은 황폐화되고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됐다.

현재 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일차 산업과 노동집약 제조업(의류, 신발 등)과 함께 자동차 부품, 전기 · 전자 등 고기술 산업이 태국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태국의 노동인구 약 40%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에 지나지 않는다.

태국은 한국이나 이웃 말레이시아에 비해 시장개방을 일찍 실시하였기 때문에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런 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적 불안정을 더 심화시켰다. 태국자본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융시스템이 위기에 빠지자 초국적 투기자본의 공격이 가세하면서 바트화의 평가절하가 가속화됐다.

IMF는 1,720만 달러의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건축재정, 세금인상, 공기업 사유화)을 강요하였다. 이는 태국 경제침체를 보다 심화시켜 폐업, 파산, 해고, 실업, 빈곤을 불러왔다. 경제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150만 명까지 증가하자 많은 노동자들이 노총에 다시 가입하거나 비공식부문(노점, 가사노동, 성매매 등 정부에 의해 규제되지 않은 경제부문)에 진출하게 되었다.

IMF 위기는 임금노동자의 삶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의미하였다. 자본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유연화 조치들이 도입되었고 비정규고용이 일반화되었다. 현재 많은 임금노동자가 빈곤층에 속하는데도 IMF가 요구한 건축재정 정책으로 인해 사회복지 제도는 줄어들었고 사유화로 인해 민중에 대한 공공서비스도 감소된 상태이다. 지속적인 사유화 정책은 공기업노조를 약화시키고 있다. 공공부문 노조와 민간부문 노조에 적용하는 노동관계법이 달라서 공기업들이 사유화되면 기존 노조의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2006년 쿠데타가 일으킨 정치위기와 경제위기가 결합되면서 노동자들은 다시 큰 고통을 겪었다. 태국경제는 2008년 4/4분기부터 4분기를 연속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 시기 실업자 수는 최대 200만 명에 이르고, 실업률은 IMF위기 때보다 높았다. 자동차 부품, 전자, 기계, 관광, 호텔 등 수출에 관련한 산업들이 특히 큰 타격을 받았다. 1997년 이후에 양산된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해고되었다.

2011년 가을에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경제위기가 1997년 IMF위기, 2006년 쿠데타 후의 경제위기에

이어 3번째 위기로 불린다. 홍수가 주택, 공공건물, 인프라에 대규모 손실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많은 공장이 휴업, 폐업되고 대량 해고가 발생하였다. 앞으로 유사한 규모의 홍수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외국인자들이 생산지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 노조들은 작년부터 해고와 일자리 감소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 4. 법적 환경

태국은 1919년 ILO 설립에 참여하였지만 1956년까지 ILO의 기본 기준을 국내 법제도에 아예 반영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도 ILO 87협약(결사의 자유권), 98협약(단체교섭)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태국 노동운동 진영은 ILO 기본 협약 기준을 핵심 과제로 삼아 매년 메이데이에 기준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인다.

태국 헌법은 전체적으로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노동법제는 노동3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 노조설립

1975년에 시행된 노동관계법은 민간부문에만 적용된다. 노동관계법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자국민 노동자가 노조 설립을 신청하면 사업(장)단위 또는 업종단위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사업(장)노조가 2개 이상 모이면 산별연맹을 결성할 수 있으며, 연맹이 25개 이상 모이면 노총을 결성할 수 있다.

노조 설립 신청자가 10인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노조 설립 발기인이 10인 이하인 경우 노조 결성을 불허하는 것으로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반된다. 노조 형태에 대한 제한도 노조의 자유로운 설립을 제한한다. 연령이 20세 이상인 노동자에 한해 노조 설립이나 노조 간부 피선거권을 주는 조항, 해고될 경우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조항도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게다가 이주노동자의 노조 결성권이거나 노조 간부 피선거권은 아예 부정된다.

##### 단체교섭권, 중재와 파업

태국은 사업(장)단위 교섭만을 법제화하고 있어 산업차원 교섭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동관계법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경우는 고용지침(work rules)으로 단체협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은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도 교섭창구를 허용한다. 한 사업(장)의 전체 노동자 중 15%가 연명한 요구안과 교섭위원의 이름을 사용자에게 제출하기만 하면 교섭권이 부여된다. 반면에 노조는 20% 이상의 조직률을 유지해야 교섭권이 부여된다. 이 조항은 노동운동의 성장을 더 어렵게 만든다.

요구안이 제출되면 3일 이내에 교섭을 시작해야 한다. 교섭을 시작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재요청이나 파업, 사업장 폐쇄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노조의 정치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한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다.

##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는 조항은 노조가 이미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노동자에 대한 탄압을 방지하지 못한다. 노조설립 신고가 노동부에 제출되면 노동부는 관습적으로 사용자에게 연락하여 10인의 노조설립 신고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를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자의 이름을 사용주에게 제공하여 노동탄압을 초래한다.

## 공공부문 노조

2000년에 채택된 공기업노동관계법에 따르면, 공기업에서는 비관리직 노동자의 10% 이상을 대표하는 10인 이상의 노동자가 설립자로 나설 경우 노조를 설립할 수 있고, 25% 이상의 조직률을 유지해야 교섭대표권이 부여된다. 사기업노조와 함께 연맹이나 노총을 결성하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공기업에서의 파업이나 사업장 폐쇄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최저임금

최저임금 기준은 매년 노사정이 참여하는 중앙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지역단위로 결정되는데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편차가 심각하다. 예를 들어 태국 북쪽에 위치한 파야오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최저임금은 월 153달러이나 방콕과 주변 지역은 월 215달러이다.

## 6. 노동운동 현황

태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노동 인구는 총 3,654만 명이다. 노동인구는 군인과 공무원 323만 명, 공공부문 노동자 약 40만 명, 민간부문 노동자 900만 명과 비공식부문 노동자 2,300만 명으로 나뉘어 있다. 등록된 이주노동자는 약 50만 명인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하면 이주노동자 인구는 최대 30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주노동자의 80%는 버마인이다.

2010년 현재 민간부문의 노조 조직률은 약 3.7%에 불과하다. 공공부문의 조직률은 최대 50%로 추정되지만 소속 노동자는 18만 명밖에 안 된다. 76개 도 중에 36개 도에만 노조가 존재하고, 전체 등록된 노조 1,258개 중에 71%(951 개)가 수도권과 주변 5개도에 위치한다. 이들 수도권과 주변 지역의 노조가 24만 7천 명, 즉 태국 전체 노조 조합원의 74%를 포괄한다. 다른 국가와 달리 태국은 수출가공지구 내에서의 노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와 사용자의 지속적인 방해로 대부분의 수출가공지구에는 노조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 자동차부품, 전기제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공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역시 대부분의 공단에 노조가 없다.

## 노조지역모임(Union Area Groups)

1970년대부터 사업(장)노조들은 서로를 지지·지원하기 위해 노조지역모임(Union Area Groups)이라고 불리는 비공식 다업종 지역단위 연대체를 구성했다.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통합의 수준도 천차만별이지만 공식 노조연맹이나 총연맹보다 노조지역모임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장)노조가 처한 현실적 어려움(소규모, 사측의 탄압 등)을 극복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노조지역모임은 일상적인 사업으로 조직과 교섭, 교육을 공동으로 진행한다. 일부 지역노조모임은 지역사회의 의제 설정 활동도 진행하는데 이를 통해서 조합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현재 8개 노조지역모임이 존재한다.

## 노조연맹

2010년 현재 18개 노조연맹이 노동부에 등록되어 있다. 전체 1,258개 사업(장)단위노조 중에 불과 212개가 연맹에 가맹한 상태이다. 연맹의 영향력은 편차가 있는데, 대부분은 정부나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정도의 영향력이 없으며 활동 내용이 교육과 가맹노조에 대한 자문 등에 국한된다.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조연맹들이 국제산별조직과 관계를 맺는데, 현재 18개 연맹 중에 12개가 국제산별조직에 가맹한 상태이다. 국제산별조직 가맹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종종 의존적인 관계가 형성되어 태국노동운동의 자주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 노총

현재 민간부문 노총이 12개 존재한다. 노총의 난립은 노조 지도자들 사이의 갈등과 경쟁, 태국정부의 노조 관련 정책의 산물이다. 노총과 노조연맹은 정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통은 조합원의 규모가 아니라 가맹조직의 수가 수혜 여부의 기준이 된다. 이런 기준으로 인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연맹이나 노조들이 양산되고 노동운동 내의 갈등이 유발된다. 예를 들어 정부의 풍부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 노총들은 경쟁적으로 노조를 설립한다. 그러나 많은 노총 지도부들이 소속 연맹이나 단위 사업장으로는 지원금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노총이나 연맹 탈퇴와 새로운 노조 결성이 반복된다. 또한 가맹노조 수에 따라 노총에 노사정기구 참여 기회가 주어지는데, 노사정기구를 통해 개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조 지도자들이 노총을 결성하고 페이퍼 노조를 만들어 규모를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 노총 난립은 노동운동의 정책적 단결력을 취약하게 만든다. 노동운동 진영이 노동정책에 관해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태국정부는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1〉 태국 노총 현황(2007년 현재)

조 직 명	창립연도	가맹조직 수	조합원 수	비 고
National Congress of Thai Labor(NCTL)	1979	416	260,00	어용
Labor Congress of Thailand (TCL)	1976	226	158,537	국제노총 가맹
Labor Congress Center for Labor Union of Thailand(LCLUT)	2000	91	70,400	
National Congress of Private Employees of Thailand(NCPE)	2004	61	46,000	
Confederation of Thai Labor(CTL)	1993	132	42,000	
Thai Trade Union Congress(TTUC)	1983	80	30,00	국제노총 가맹
Labor Congress Freedom of Thailand(LCFT)	2004	33	26,000	
National Labor Congress(NLC)	1991	20	20,000	어용, 최저임금 인상 반대
National Free Labor Union Congress(NFLUC)	1978	50	20,000	어용
Thai Labor Organization(LCTLO)	2006	17	5,200	
National Labor Congress of Employees(NCE)	2004	36	---	2007년에 NCTL와 분리, 두 노총 위원장이 형제
Labor Congress of Thai Automobile Workers(LC.TAW)	2007	18	26,000	
*State Enterprise Workers' Relations Confederation(SERC)	2000	41	165,000	비공식 공공부문 국제노총 가맹

자료: AFL-CIO Solidarity Center, "The Struggle for Workers Rights in Thailand" (2007).

공공부문에는 공기업노동자관계총연맹(State Enterprise Workers Relations Confederation, SERC)이 존재한다. SERC은 등록된 노총은 아니지만 조직률이 높고 대정부 교섭력이 상당히 강하다. SERC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노조를 분리하는 법령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고, 현재 이주노동자조직을 포함해 민간노동자조직 가맹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민간·공공부문 노조의 연합을 허가하도록 법 개정안을 기안하고 있다.

공식 연맹과 노총의 부정부패를 극복하고 노동운동 단결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태국노동연대위원회((Thai Labor Solidarity Committee, TLSC)이다. 2000년에 결성된 TLSC는 비공식적인 연대체이지만 민주노조 총연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TLSC은 여러 사업(장)단위노조와 노조연맹, 지역노조모임, 노동 관련 사회단체를 포함해 총 32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SERC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TLSC는 비정규직 폐지와 이주노동자 권리 강화, ILO 87협약과 98협약 비준, 공기업 사유화 저지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건전한 공식 노총이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노조들이 TLSC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TLSC에 참여하는 단체 중에 태국노동캠페인(Thai Labor Campaign, TLC)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TLC는 노조의 조직사업을 지원하고 노동자 상담과 대정부 투쟁을 담당한다. 현재 전자공단 노동자 상담과 지원, 공식부문 최저임금 인상, 이주노동자 정책 개선, 해외로 이주한 태국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표방하지는 않지만, 노동운동 진영 내의 노란셔츠, 붉은셔츠 경향 양

쪽을 다 비판하면서 계급단결과 노동해방을 주장한다. 국제연대를 고민하는 좌파 노동자단체라면 TLC의 존재와 활동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낮은 최저임금과 해외 이주	
<p>TLC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노동운동의 핵심 의제로 보고 있다. 앞에 언급했듯이 태국의 최저임금 기준은 지역별로 결정되고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편차가 심하다. 최저임금이 낮은 지역의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고, 해외이주를 택하는 사람들도 많다. 농촌지역의 가난을 벗어나 보려는 젊은이들은 이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브로커의 사기와 인신매매에 취약하다. TLC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단기적인 대응으로는 농촌지역에 이주노동자정보센터를 설치하고 귀국한 이주노동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주과정과 노동권에 관련된 정보를 예비 이주노동자들에게 제공한다.</p> <p>장기적인 대응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들 수</p>	<p>있다. 노동운동 진영이 오랫동안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 결과, 작년에 새로 취임한 정부가 최저임금을 월 300달러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2012년 4월부터 7개도에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2013년까지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TLC는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TLSC 및 다른 노동운동조직들과 연대하여 꾸준히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TLC는 최저임금 월 300달러 기준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게 되더라도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니며, 월 500달러 기준의 생활임금을 쟁취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p>

## 7. 이주노동자운동

태국에 체류하는 이주노동자 수가 최대 30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지원, 조직화, 정책 개선 활동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여러 단체가 있다. 두세 개의 큰 NGO가 이주노동자 상담과 법률적 지원, 권리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일부 NGO와 사회단체들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등록체계 개선, 산재보험 등 사회복지 접근성 확대, 노동3권 보장에 관련한 대정부 투쟁을 하고 있다. SERC와 TLSC는 이러한 요구들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시도하는 노조는 거의 없다. 노조의 입장에서 볼 때 이주노동자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의 불안정성과 접근의 어려움도 문제지만, 노조 설립과 노조간부 피선거권이 금지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는 수익성 없는 사업이다. 의류산업 분야의 일부 사업장단위노조가 같이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이다. (의류산업 분야에서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는 총 100명 정도이다.)

태국에 본부를 둔 망명노조인 버마노조총연맹(Federation of Trade Unions Burma, FTUB)과 산하조직인 미얀마선원노조(Seafarers Union Burma, SUB)가 1990년대 중반부터 태국에 체류하는 버마 이주노동자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의류, 어업, 수산양식,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조합원이 수백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FTUB는 이주노동자 문제보다 조국인 버마의 민주화운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주노동자권리네트워크(Migrant Workers Rights Network, MWRN)는 태국 내에서 이주노동자의 조직화와

주체화에 전념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2009에 결성됐을 때부터 계속 NGO들의 지원을 받고 있긴 하지만, MWRN은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이끄는 조직으로 사뭇사콘도에서 수산양식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태국 노동법의 제약 때문에 노조설립을 시도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이주노동자노동조합과 유사한 성격이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현재 600명에 달하는 회원이 있으며 SERC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2012년에 가맹절차를 밟아 SERC의 산하조직이 될 예정이다.

태국 홍수가 노동자에게 미친 영향과 노조의 대응	
<p>2011년 10월에 일어나 대규모 홍수는 태국 경제와 노동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정부통계에 따르면 28,000여 사업장이 손실을 보았고, 5만여 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다. 2012년 3월 현재 284개 사업장은 아직 폐쇄된 상태이며 홍수로 인한 정직자 16만여 명도 아직 복직하지 못한 상태이다.</p> <p>홍수의 제일 큰 피해자는 이주노동자들이었다. 대대적인 파괴와 일자리 감소로 인해 버마 이주노동자 10만여 명이 본국으로 돌아갔다. 그 중 반 정도는 강제퇴거였고 나머지 반은 자진출국이었다. 등록된 이주노동자의 많은 수가 노동허가 서류를 잃어버리거나 홍수를 피해 허가지역을 벗어나다보니 미등록 상태가 된 것이다. 서류가 없어 버마로 돌아간 이주노동자들이 홍수 후에 태국으로 돌아오려고 밀수 노선을 이용하다가 인신매매에 노출되기도 했다. 태국에 남은 이주노동자들도 많은 수가 언어장벽과 불안정한 사회적 지위 때문에 정부의 수해구제프로그램</p>	<p>에 접근하지 못하였다.</p> <p>SERC가 홍수 대응에 앞장섰다. 홍수가 발생하자 SERC 활동가들이 피해가 제일 심한 방콕 변두리와 태국 북부로 파견되어 식량과 식수, 옷, 의약품 등의 공급과 운수수단 제공 등의 구제활동을 벌였다. 사뭇송크람도에서는 수해구제센터를 열어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구분 없이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고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숙소를 제공하였다.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주노동자에게는 여행서류 작성과 신청 작업을 지원하였다.</p> <p>SERC에 따르면 홍수로 인한 정리해고들 중의 일부는 불가피한 것이었지만 많은 경우가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 TLC는 사용자들이 홍수를 빌미로 노조 간부들을 해고시켰다고 주장한다. SERC와 TLC 등 노동운동 진영이 현재까지도 해고를 맞서 투쟁하고 있지만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서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p>

## 8. 태국노동운동의 한계와 잠재력

태국의 낮은 노조조직률과 취약한 노동운동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여러 차례의 군사 쿠데타와 지속적인 정치적 불안이 노조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최근의 노란셔츠·붉은셔츠 갈등도 노동운동 내에 심각한 분열을 일으켰다. 또한 군주제와 귀족사회의 유산에다 정부의 악선전과 탄압이 더해져 노조에 대한 의심이나 공포심이 상당하다. 노사정기구에 참여할 자격을 획득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실제 없는 페이퍼노조를 설립하는 일부 노총 지도부의 관행과 농촌지역에서의 노동운동에 대한 정보 부재가 노동운동의 이미지 제고를 더 어렵게 한다. 상대적으로 강한 공공부문노조들이 민간부문노조들과 힘을 합쳐 노총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법률도 노동운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업체의 70%가 10인 이하 고용 사업장인 태국에서 노조 설립자가 10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노조설립 조건과 이주노동자의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는 규정을 볼 때, 태국에서의 노조 조직률 향상은 쉽지 않은 과제이다.

반면에 최근 탁신정권의 포퓰리즘 정책은 탁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노동운동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비록 전통적인 엘리트계급이 여전히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긴 하지만, 이들의 권력을

정당화해주던 위계적 전통사회구조가 흔들리고 일반 태국인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 아래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권에 대한 요구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또한 태국 노동운동 진영 내에서 단결력을 강화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여러 유의미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역노조모임이나 TLSC와 같은 비공식 연대체의 결성과 공동 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조직하고 주체가 되는 조직으로서 MWRN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러한 조직들이 태국노동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자료

Solidarity Center (Thailand),

<http://www.solidaritycenter.org/content.asp?pl=423&sl=407&contentid=902>

Solidarity Center, "Justice for All: The Struggle for Workers' Rights in Thailand," (2007).

Sakdina Chatrakul Na Ayudhya, "The Thai Labour Movement: Strength Through Unity," Friedrich Ebert Stiftung (2010).

Marc Saxer, "In the Vertigo of Change: How to Resolve the Political Crisis?," Friedrich Ebert Stiftung (2011).

Thai Labor Database, <http://www.thailabordatabase.org/en/news1.php>

Thai Labor Campaign 사이트,

[http://thailabour.org/autopagev4/show\\_all.php?auto\\_id=9&TopicPk=](http://thailabour.org/autopagev4/show_all.php?auto_id=9&TopicPk=)

Giles Ji Ungpakorn, Thailand's Crisis and the Fight for Democracy (2009).



# 방글라데시

Bangladesh

## 국가, 경제 기본 정보

국명: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인구: 1억5천만 명

종교: 이슬람교 86.6%, 힌두교 12.1%, 불교 0.6%, 기독교 0.3%

GDP: 842억 달러, 1인당 554달러 (2008)

주요 산업: 농업(GDP의 19%)—쌀, 황마(jute), 차, 설탕, 밀 / 제조업(GDP의 28.6%)—의류, 니트웨어, 냉동어류, 섬유, 비료, 설탕, 차, 가죽 등

수출: 의류수출이 80% 차지

## 1. 역사적 배경

기원후 1000년 무렵 이슬람인들이 벵골(Bengal) 지역의 힌두, 불교 왕국들을 침략하여 벵골 동부의 대다수 주민들을 이슬람으로 개종시키고 벵골 서부에도 소수 이슬람 사회를 형성하였다. 이때부터 이 지역의 역사와 정치에 이슬람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15세기 후반에 포르투갈 상인들과 선교사들이 유럽인으로서 처음으로 벵골지역에 도착했다. 뒤를 이어 네덜란드와 프랑스, 영국의 동인도회사가 잇달아 벵골에 나타났다. 18, 19세기 동안 영국은 인도의 캘커타에서부터 벵골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상업적, 정치적 세력을 점차 확장해갔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지배 아래 있던 인도에서 애국운동이 펼쳐지면서 힌두교와 이슬람교도들 사이에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되었다. 양 진영에서는 각자 자신을 대표하는 당을 만들어 영국 왕실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치권을 되찾고자 노력하였으나, 이슬람교도들의 정치, 사회, 경제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슬람인들의 당(黨)인 전인도무슬림연맹(All-India Muslim League)은 1935년에 있었던 첫 선거에서 패배하자 이슬람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을 따로 모아 1940년에 독립주로 선포하였다. 이로 인해 캘커타 등지에서 대규모 폭력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947년에 인도가 독립하면서 벵골지역의 힌두교 지역은 인도로 편입되고 이슬람교 지역은 파키스탄으로 분리되었다. 당시 파키스탄의 영토는 인도를 가운데에 두고 동쪽의 동파키스탄과 서쪽의 서파키스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언어의 차이와 서파키스탄에 치우친 정책 등으로 서로 대립하는 관계였다. 1970년 12월 선거에서 동파키스탄의 독립주의자인 셰이크 무지브 라만(Sheikh Mujib Rahman)이 이끄는 아와미연맹(AL, Awami League)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파키스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의회개원을 무기한 연기하고 군대를 동원해 동파키스탄을 장악했다. 파키스탄 군대에 맞서 벵골독립전쟁이 벌어져 천만 명이 넘는 힌두교인들이 인도의 아삼지역이나 서파키스탄 등지로 피신하였다. 서파키스탄(현 파키스탄)과 대립하고 있던 인도가 1971년 겨울에 군대를 파견하여 동파키스탄을 지원하면서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선포했다.

1972년에 헌법이 선포되고 독립운동 지도자인 라만이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의회민주주의 체제가 시작됐지만, 방글라데시는 그 후로도 약 30년간 극심한 정치적 혼란과 부정을 경험했다. 13명의 행정부 수반 중 초대 대통령인 셰이크 무지브 라만과 8대 대통령인 지아울 라만이 암살당하고 4번의 쿠데타가 일어났다.

방글라데시는 2008년 12월 17일에 2년 동안 지속되었던 국가비상사태를 해제하고, 12월 29일에는 7년 만에 첫 총선을 치렀다. 87%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 총선에서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전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연맹(AL)이 총 300석 중 245석을 확보한 가운데, 제 1야당인 방글라데시국민당(BNP)은 3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초대 대통령인 셰이크 무지브 라만의 딸이며, 경쟁자인 BNP의 당수 칼레다 지아(Khaleda Zia)는 8대 대통령인 지아울 라만의 딸이다. BNP가 1991년부터 1995년까지, AL이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다시 BNP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집권했고, 군부의 지원을 받은 과도정부의 통치에 이어 다시 AL이 2008년부터 정권을 잡음으로써 지난 20여 년간 두 전직 대통령들의 딸이 번갈아가며 방글라데시 총리를 맡는 형국이다.

방글라데시 국가정체는 의원내각제로, 명목적인 국가수반은 의회에서 선출되는 5년 임기의 대통령이지만 그 역할은 주로 정부 이양기에 집중되어 있다. 정권 교체기에는 3개월간 시민사회가 통치를 한다(전직 대법관을 수반으로 하는 임시정부). 이러한 관례는 1991년부터 시작됐고, 1996년에 헌법에 명시되었다.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로서 일부 권한을 제외한 전권이 집중되어 있다. 각 부처의 장으로 구성되는 내각은 대통령에 의한 지명과 총리의 승인으로 구성된다.

정당은 방글라데시국민당(BNP)과 방글라데시 아와미동맹(AL)의 양당 체제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BNP는 이슬람정당을 표방하고 AL은 세속주의정당을 고집한다. 기타 정당으로는 자티야당과 극단주의 이슬람 정당 등이 있다.

## 2. 노동운동의 역사

인도-파키스탄 아대륙의 첫 번째 노동조합은 All India Trade Union Congress였다. 파키스탄 독립 후 1947년에 동파키스탄 노동조합연합회(East Pakistan Trade Union Federation)가 구성되었고, 1959년에 파키스탄노동연맹(Pakistan Federation of Labor)이 결성되었다. 파키스탄 내 유일한 중앙 노동기구였다. 1969년에 노사관계법이 선포된 후 노조결성이 자유로워졌으나 등록을 해야만 활동할 수 있었다. 1971년 12월에 방글라데시로 독립한 후 정부는 은행, 보험회사를 포함한 주요 산업 및 서비스분야를 국유화하였다(김원중, 방글라데시 투자현황과 노사관계 전망, 2010. 3).

독립 초기 황마, 석유, 설탕 등의 산업분야에는 좌파정당들이 조직한 강력한 노동조합이 존재했다. 1960년대 초부터 다카, 쿨나, 치타공 등에 주로 위치한 산업지역의 노동자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적극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들이 군부통치에 대한 저항운동과 독립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독립 이후 들어선 정권들은 민간정권이든 군사정권이든 가릴 것 없이 노동운동 세력을 포섭하기 위해 노조 안에 부패인사를 심고 폭력과 살해도 마다하지 않았다. 1980년대 군부 치하에서 노조에 대한 억압과 회유는 극에 달했다. 노동운동 지도자들을 지배 엘리트층으로 유인하고 노조를 부패시키는 것이 일상적 관행이 되었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노조를 신뢰하지 못했고 노조의 힘은 계속 약화되었다. 세계은행의 공기업 사유화 프로젝트 아래에서 수많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해외여행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뇌물을 받았다. 대부분의 노조들이 집권당의 도구로 이용되면서 점차 일반 노동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제조산업 부문은 1980년대부터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이 밀어붙인 신자유주의 정책과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2002년에 세계 최대 황마생산 기업인 Adamjee Jute Mills의 폐쇄로 정점에 달했다.(Anu Muhammad, 2011. 8)

### 3. 경제적 환경

방글라데시 경제는 전반적으로 국제금융자본으로부터 고립되어 있어 2009년의 세계 금융위기도 불구하고 6%대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섬유 수출산업 역시 세계적 경기침체의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고 있다. 전체 수출액 156.7억불(2010회계연도) 중 79%가 중저가 섬유 의류제품으로 월마트(Walmart) 효과에 따라 오더물량이 더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0년 11월에 단행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출가격 경쟁력 하락도 우려되지만, 기존의 주력시장인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여 일본, 캐나다 시장으로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 시장이 다변화되고 있다. 전체 수출은 GDP의 약 16.4%를 차지하며, 수입은 약 213억 달러로 GDP 규모의 24%에 해당한다. 주로 비료, 자본재, 직물, 면, 철강류, 밀 등을 수입한다.

〈표1〉 방글라데시 국내총생산

연 도	2006/2007	2007/2008	2008/2009	2009/2010	2010/2011
GDP(억 달러)	680	789	891.6	998	1065
GDP성장률 %	6.8	6.2	5.7	5.8	6.7
1인당 GDP	430	491	564	605	669

최근 중국, 베트남 등 기존 생산국들의 환율 불안과 인건비 상승으로 이들 국가에 있던 제조공장들이 방글라데시로 재이전되는 추세이고, 2011년 EU가 최빈 개도국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완화하면서 수출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11년 3월 말 현재 의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

2009/2010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약 800만 명의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해외에서 이주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이 송금하는 액수가 연간 100억 달러 이상으로 방글라데시로서는 이주노동이 최대 외화벌이 수단이 되고 있다. 2009/2010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전년 대비 13.4% 증가한 11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동국가의 정치 불안으로 2011년에는 해외로부터의 송금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2월 피크 이후 하락, 2011년 1분기에 -5.7%를 기록했다. (KOTRA 자료)

#### 4. 노동법과 제도

공장법, 근로자 재해보상법, 하역노동자법, 상사법, 차 재배노동 규약, 운송근로자 규약, 임금지급법, 최저임금 규약, 고용법, 출산수당법, 노사관계법 등 노동관련 법이 47개로 분산되어 있다. 노동자의 최소 연령은 공장 및 기업 공히 16세 이상이며, 근로계약은 문서계약 및 구두계약이고, 정부 및 사기업에서 숙련 및 반숙련 노동자의 수습기간은 3개월에서 1년으로 정해져 있다. 수습기간 중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을 종료하려면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

- 노동분쟁 해결은 당사자 간 조정 실패 시 피해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정부의 조정기구가 개입하여 진행된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당사자들이 약정서에 서명을 하고 조정관은 증인이 된다. 합의 실패 시 사안에 따라 당사자가 파업, 공장폐쇄를 할 수 있다. 정부는 1개월 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분쟁을 금지할 수 있다. 기간산업인 전기, 가스, 석유, 수도공급, 병원, 소방, 철도, 항공, 항만 등의 파업은 금지되어 있다.

- 임금은 공공분야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임금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다. 사기업에서는 단체협상을 통해 이뤄진다. 사기업도 공공분야의 임금 체계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 근로시간은 공기업, 사기업 공히 일 8시간 30분(30분의 휴식 및 식사시간 포함), 주당 48시간이며, 금요일이 휴일이 다. 초과근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초과근무수당은 통상근무의 2배이다.

- EPZ(수출가공지역)에는 노사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4년에 'EPZ 노동자 결사 및 노사관계법'이 만들어졌지만 2006년까지 노동자 대표 및 복지위원회만 설립되었다. 2008년의 찬반투표에서 69개 사업장이 복지위원회가 아닌 노동자협회에 찬성표를 던졌다. 2009년에 법이 개정되어 노동자협회는 노동자 복지조직으로 대체되었다. EPZ 내 파업과 공장폐쇄 금지조치가 실시되었는데 2008년 10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수출가공지역관리청(BEPZA)이 이를 2010년 10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파업 금지 종결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따라서 EPZ 내 단체교섭권, 노조결성권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노조 대신 노동단체들이 의류노동자를 조직하는 실질적 조직으로 부상했다. 사업장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산업 중심의 투쟁에 중점을 두고 있다.

## 5. 노조 현황

방글라데시에서는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30%의 찬성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 1972년에 등록된 노조 수는 2,525개, 조합원은 682,923명이었고, 2004년 12월에 등록된 노조는 6,492개, 조합원은 2,094,887명이다.

방글라데시는 산업별 노조가 강력하며 각각 특정 정치집단의 후원 하에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한다. 개별 업체에서 발생된 문제가 정치쟁점화되는 경우, 전국적 동맹휴업인 하탈(Hatal)로 확대된다. 대부분 기업에 노조가 있고 당파별로 나뉘어져 있다. 노조간부들은 정부나 기업, 최고경영층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정도로 변질되어 새로운 노동귀족층을 형성했다. 정치인들도 자신의 개인적 이익, 정당의 이익을 위해 노조를 이용하려 한다. 이러한 현상들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글라데시를 조합의 나라라고 하며, 전국 규모의 파업은 대부분 정치권에서 주도한다. 정부가 노사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단체교섭의 주요 쟁점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전국적 수준의 노조연맹과 중앙정부 사이의 교섭에 의해 타결된다. 모든 노동조합은 방글라데시 노동조합연합회(SKOP: Sramik Karmochari Oikka Porishad)에 가입되어 있다. (KOTRA 자료)

〈표2〉 최근 3년간 노동쟁의 발생 추이

연 도	2008	2009	2010
노동쟁의 건수	90	110	119

국제노총 ITUC에 가입되어 있는 방글라데시 노총 숫자는 6개.(ITUC 홈페이지 2011. 3)

Bangladesh Free Trade Union Congress (BFTUC)- 85,000명

Bangladesh Jatyatabadi Sramik Dal (BJSJ)- 180,000명

Bangladesh Labour Federation (BLF)- 102,000명

Bangladesh Mukto Sramik Federation (BMSF)- 204,000명

Bangladesh Sanjukta Sramik Federation (BSSF)- 155,000명

Jatio Sramik League (JSL)- 150,000명

## 6.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기업

방글라데시에는 섬유, 의류분야를 중심으로 15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다. 주요 투자지역으로는 다카와 치타공에 설립된 수출가공지역(EPZ)과 다카 근교의 사바(Savar), 가지푸르(Gazipur), 우타라(Uttara) 등을 들 수 있다.

〈표3〉 한국기업 진출현황(2011. 7월 현재)

구 분	진출기업 분류	기업 수
대 기업	삼성전자, 대우인터내셔널, KT, 한진해운 등	9
중견/중소기업	영원무역, 신원 등 의류 제조업체	96
	기타	50
합 계		155

이 가운데 EPZ 입주 기업은 약 70개 사 : 다카 EPZ 22개, 치타공 EPZ 40개, 기타 7-8개(EPZ는 8개가 있음)

EPZ 투자 기업은 10년간 세금 혜택, 자본재 수입에 대한 면세, 3년간 외국인 임금 소득세 면제, 10년간 배당세 면제,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수출에 대한 면세, 미국, 유럽, 일본 시장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혜택, 미국의 최혜국 대우, 수익 본국 송금 가능 등의 혜택을 받는다.

〈표4〉 현지에 진출한 주요 한국기업

연번	회사 명	투자년도	투자내역	투자금액(USD 천)
1	영원무역	1980	스포츠 의류, 신발, 가방	101,000
2	다다	1991	모자	13,000
3	성광 스웨터	1997	스웨터	15,000
4	유풍실업	2000	모자	2,500
5	에스지위카스	1995	남, 여성복	12,035
6	천지	1993	스웨터, 염색	5,000
7	태평양 지퍼	1992	지퍼	5,000
8	해송	1992	스웨터	5,000
9	대유	1997	스웨터, 염색	20,600
10	HKD	1991	텐트	10,000

(KOTRA )

영원무역 파업투쟁 사례	
<p>2010. 12. 11. 방글라데시 치타공 지역에서 3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실탄을 사용하여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3명이 사망하고 250명 이상이 상해를 입었으며, 무려 30,000명이 기소되었다. 이 시위를 주도한 세력은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영원무역이라는 한국기업의 노동자들이었다.</p> <p>방글라데시에서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접 고용만 300만 명이고, 간접고용까지 합하면 2,000만 명이 넘는다고 한다. 과거의 한국처럼 방글라데시도 수출과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고국으로 송금하는 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섬유산업이 전체 수출의 80%를 차지한다. 치타공의 수출가공지역에</p>	<p>방글라데시의 섬유산업 업체들이 집중해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가장 큰 회사가 영원무역이다.</p> <p>영원무역은 방글라데시 최대의 의류제조업체이자 최대의 수출회사로서 수도인 다카와 치타공에 총 17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액의 4%를 담당한다. 나이키, 노스페이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30여 개의 의류 브랜드에 OEM(original equipped manufacturing)방식으로 제품을 납품한다. 2009년 총 매출액은 4,377억 원이고, 치타공 공장에 36,000명, 다카 공장까지 합치면 총 42,0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p> <p>시위 직후인 2010. 12. 14. 새벽 1시 경 섬유노동자연합포럼(Garments Workers Unity Forum)의 대</p>

표인 미슈(Mishu)가 불법적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친중국 좌파운동가인 미슈에게 중국의 사주를 받아 섬유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시위를 일으켰다는 혐의를 씌웠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런 방식으로 2010. 12. 11. 시위를 비롯한 섬유노동자 시위의 책임을 외국 세력의 개입에 돌리고 있다.

그러나 시위가 일어난 곳이자 영원무역의 공장들이 위치한 치타공 수출가공지역의 지역청 총책임자는 외부세력이 시위에 개입할 수 없으며 해당 시위가 전적으로 영원무역 노동자들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방글라데시의 법정 최저임금은 2006년에 월 24달러(약 1660타카)로 책정된 이후 5년 동안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섬유노동자들은 그동안 월 72달러(약 5,000타카)의 최저임금을 주장하며 꾸준한 투쟁을 벌여왔는데, 2010년에 인상된 최저임금은 월 43달러(3,000타카, 수출가공지역은 월 48달러)로 소폭 인상에 그치고 말았다. 방글라데시의 1인당 1일 최저생계비는 133타카로 한 달이면 약 3,990타카가 필요하고, 부양해야 될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고려 할 때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최소 월 15,900타카가 필요하다.

영원무역이 노동자들에게 법정 최저임금보다 월 10달러를 더 지급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최저임금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그 임금으로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수출가공 지역청의 총책임자는 최저임금이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도 영원무역 수준의 임금을 주지 않고서는 사람을 고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영원무역이 다른 회사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2010년 영원무역 노동자들의 시위는 2005년부터 시작되어 특히 2009년부터 격렬해진 ‘법정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에도 6명의 노동자가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하였고, 2010년 상반기에는 72건의 노동자 시위가 발생하여 988명이 경찰에 의해 상해를 입었고 6월 한 달에만 40여명의 노동자들이 다쳤다.

이런 상황에서 영원무역 노동자들의 해묵은 불만이 시위로 표출되었다. 2010년에 변경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비숙련공의 임금인상 폭이 회사에 오래 근무한 숙련공들의 인상 폭보다 높아지자, 가뜰이나 비현실적인 임금 때문에 누적돼 있던 숙련공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이

다. 설상가상 그 동안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됐던 인플레이션 수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더 이상 지급되지 않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목격자들은 회사관리자들과의 면담을 하러 간 남성 노동자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퇴근을 거부한 채 공장 안을 수색하던 노동자들이 면담을 하러 간 노동자들 중 5명이 양손목과 발목이 칼에 베인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관리자들에게 이들의 부상을 항의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의 소재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 직후 다른 공장에서 온 노동자들까지 합세하여 사라진 노동자들의 소재파악을 요구하며 관리자들을 억류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 폭행과 집기 파손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방글라데시 경찰 당국은 억류된 사측 관리자들을 구출하기 위해 진압작전을 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최루탄과 곤봉에 의한 부상자가 속출했다.

영원무역 측은 외부 세력이 피 묻은 종이를 보여 주며 노동자들을 선동한 탓이라고 설명했지만, 많은 목격자들이 5명의 노동자가 사측과의 면담 후에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었으며 나머지 노동자들의 소재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아울러 병원으로 후송된 2명의 노동자들도 다음 날 병원에서 사라져 버려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0. 12. 12. 전날 영원무역 사측에서 발표한 휴업공고를 듣지 못하고 정상 출근한 많은 노동자들이 수출가공지역 입구에 게시된 휴업공고문을 보고 수출가공지역청 앞 공터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 노동자의 증언에 따르면 여성노동자 2명이 경찰에게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사라진 우리 동료 5명이나 얼른 찾아내라.” 라고 항의하자 경찰이 곤봉으로 여성노동자들을 구타하기 시작했고, 그때까지 평화롭게 연좌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경찰의 구타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시위 양상이 폭력적으로 변화했다고 한다.

시위가 진압된 후인 2010. 12. 14. 영원무역은 다시 공장문을 열었지만, 증언에 따르면 11일 공장에서 항의 했던 노동자들과 12일 시위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무차별 체포와 구금이 이뤄졌다고 한다.

-출처: 아시아지역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사례 및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자료

## 7. 이주노동자

방글라데시의 빈곤과 일자리 부족으로 800만명 이상의 이주노동자가 중동과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진출해 주로 건설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에도 1만 명 이상의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이 주로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단체로는 WARBE Development Foundation, Bangladesh Ovibashi Mohila Sramik Association(BOMSA, 여성이주노동자단체), 카리타스, 국제이주기구(IOM) 방글라데시 사무소 등이 있으며 한국에서 이주노동 활동을 하다가 돌아간 동지들이 만든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연대네트워크'도 있다. 그 동지들 가운데 일부는 빈곤층 야학(반가운학교), 난민촌 학교사업(마드라사), 지역개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러 단위에서 이들을 지원하며 연대하고 있다.

## 8. 결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는 방글라데시는 1억5천만 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해서 살아가는 곳이다.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태풍과 홍수 등이 빈번하고 독립 이후 산업적 개발이 더디어 인구의 다수가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이다.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깊숙이 통합되지 않았기에 신자유주의 금융위기 하에서도 의류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수출산업과 해외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으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정당을 중심으로 노조가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파업이나 쟁의행위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제기된다. 자주적인 민주 노총으로 진정성 있게 활동하는 곳은 없어 보이며, 특히 수출가공지역 내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이 제약되어 있어서 노조보다는 노동단체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섬유노동자연합포럼(Garments Workers Unity Forum)이나 방글라데시 노동자연대센터(Bangladesh Center for Workers' Solidarity)와 같은 노동단체들과 연계를 맺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China

## 국가, 경제 기본 정보

국명: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인구: 13억 4,100만 명(2010년 기준, 전년 대비 626만 명 증가)

민족: 한족(전체 인구의 92%)와 55개 소수민족(8%) - 총 56개 민족

건국: 1949년 10월 1일

정부형태: 노동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주의 정부로 정치지도체제는 크게 당(중국 공산당)과 정(국무원)으로 나누어짐

국가원수: 국가주석-후진타오(2003년 3월 취임), 국무원 총리-원자바오(2003년 3월 취임)

GDP(PPP): 11조3천억 달러(2011년 추정치), 세계 3위

1인당 GDP(PPP): 8,400 달러(2011년 추정치), 세계 117위

산업구조: 1차 산업-9.6%, 2차 산업-47.1%, 3차 산업-43.3%(2011년 추정치)

노동인구: 8억1천6백만 명(2011년 추정치), 세계 1위

산업별 노동인구: 1차 산업-38.1%, 2차 산업-27.8%, 3차 산업-34.1%(2008년 추정치)

실업률: 6.5%(2011년 추정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한 공식 수치 - 농민공들과 농촌지역의 실업, 불완전노동을 고려하면 총 실업률은 9% 정도로 추산)

## 1. 중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배경

중국은 공산주의 해방을 통해 균질적인 노동계급을 창출하고 일거에 제도화를 실현했다. 그러나 이 제도화는 국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조직체가 법적 보호를 통해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동이 국가 기구의 한 부분이 되면서 행정기관으로 편입된 공식 노동조합(중화전국총공회) 이외에는 어떠한 자율적 조직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회주의 하에서도 국영기업 내의 공식 노동조합으로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노동귀족층을 형성했고 제도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농촌 출신의 농민공들이나 임시, 계약직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이나 사회보장, 임금 등 다방면에서 차별받았다.

### 1911년 공화정 시작

- 1921년 중국공산당(CCP) 창립, 중국노동협회 비서국 설립
- 1925년 5월 중화전국총공회(ACFTU, The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이하 총공회) 설립
- 1925년 5월 5.30참안 발생, 6.1일 상하이 총파업
- 1927년 총공회, 국민당파와 공산당파 대립이 격해지자 탄압을 피해 지하조직화
- 1945년 총공회 재결성
- 1948년 총공회 제6차 전국총회 성사

### 1949년 공산주의 해방

- 1949년 공산주의 해방 이후 총공회가 유일한 노동조합 조직으로 국가기구화
- 1950년 노동조합법 발표
  - \* 단 하나의 노동조합만 인정 - 총공회 외의 독립적인 노동조합 불인정
  - \* 당의 조직적 통제 명시
- 소비에트식의 국영기업(SOEs), 종신고용, 상대적으로 평등한 임금체계
- 1960년대 문화혁명 기간 동안 노동자권력 강화
- 전국 단위의 임금등급표에 따라 임금 지급

### 1976년 마오쩌둥 사망

### 1978년 덩샤오핑의 경제 개혁 시작

- 개방정책, 사회주의 시장경제 도입
- 1980년대 국지적이고 실험적인 노동시장 개혁
- 1994년 노동법 채택 및 1995년 발효로 노동시장 개혁 조치 전면화
-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국영기업 개혁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 \* 1997년 15차 공산당대회에서 기업의 사유화, 국영기업 매각 등 제시
  - \* 국영기업, 협동기업들을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 실업률 증가
- 2001년 WTO 가입

### 2006년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서 '조화사회 노선' 채택

- 임금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사회갈등 완화 목표
- 2007년 노동계약법 통과, 고용촉진법 통과
- 2010년 사회보장법 공포, 2011년 7월 1일 시행
- 2010년, 2011년부터 5년간 추진될 '12.5규획' 윤곽 제시
  - \* '양적 성장' 에서 '균형 성장' , '외수' 에서 '내수' 중심으로 전환
  - \* 지역 간, 계층 간, 도농 간 격차 완화
  - \* '국강' 에서 '민부' 로의 전환 - 포용성 성장개념

중국의 농민공	
<p>중국은 호적을 농업 호적과 비농업 호적으로 분리하여 인구이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개혁개방 이전에는 배급제도와 지방에 분산된 국영기업 체제로 큰 인구이동이 없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지역 발전의 불균형과 국영기업의 폐업 등으로 내륙의 농촌 인구가 해안 지역의 도시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1992년 도시의 식량 배급표가 없어지면서 농민공의 도시 이주가 본격화되었다.</p> <p>비농업 호적이 없는 농민공들은 도시 지역의 취업, 교육, 보건 등의 공공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주로 비숙련노동자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p> <p>중국 국무원은 2012년 2월 23일 ‘호적관리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취업, 의무교육, 직업훈련 등에서 호적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며</p>	<p>이에 어긋나는 지방 정책과 법규들은 폐지 또는 개정하라고 지방 정부에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도시에서 3년간 안정된 직장과 거주가 있고 1년 이상 사회보험료를 낸 사람은 해당 지역에 영주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국무원의 발표에 따라 농민공의 도시 이주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p> <p>중국 전역의 농민공 수는 매년 2% 내외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현재 1억5천만 명(비공식적으로는 2억2천만 명 추산)에 달한다. 이들 중 75% 정도가 1980년대와 90년대에 도시에서 태어난 농민공 2세대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고 자긍심이 강하며 사회적 불평등에 민감하다. 이들 농민공 2세대가 2000년대 후반 이후 노동자투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p>

1978년의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로 국영기업의 단위 체제가 흔들리고 임금체불이나 복지비의 삭감, 해고 등이 자행되면서 국영기업 내의 노동자들의 위치가 크게 변화했다.

개혁개방 이래 자본-노동관계가 성장함에 따라 국가는 국유자산의 사측 대표이자 노측의 이익 대변자라는 사회주의 시대의 이중적 역할을 포기하고 점차 사측의 입장에 서는 경향을 보였다. 국가는 국유자산의 유실과 기업의 효율저하 방지, 기업의 복지비 부담 가중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국유기업 노동자들에게 개혁을 위해 필요한 희생을 강요하며 국가의 경제발전 추진을 위해 사영기업 내에서도 사측을 두둔하게 되고, 지방행정단위로 갈수록 세수 확보를 이유로 사용자측에 서는 강한 경향성이 관찰된다.

총공회와 대비되는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총공회가 출범한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있어 왔다. 가까이로는 천안문 시위 때 등장한 최초의 조직적인 독립 노동운동 단체인 공자련(工人自治聯合會)이나 1991년 설립된 비밀노조 중국자유공회(中國自由工會)와 같은 독립노조 운동이 있다. 이런 운동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났지만 모두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하거나 대대적인 노동자 조직을 구성하지 못한 채 분산적 운동에 머물렀고 주도자들은 당국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탄압으로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공자련을 결성했던 철도노동자 출신의 한동팡(Han Dongfang)은 수배를 받다가 자수했으나 재판도 없이 22개월간 복역하다 결핵에 걸려 풀려났으며 미국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하자마자 체포되어 홍콩으로 추방되었다. 1991년에 중국자유공회를 만들고 1992년에 독립 정당을 창당을 준비했던 후쉬젠(Hu Shigen)은 1992년에 비공식 노조 활동가 15명과 함께 체포되어 반혁명 선동과 반혁명 단체 구성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8년에 석방되기도 했다. 1989년 천안문 시위로 잠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독립노조 운동은 중국 당국의 6.4 유혈진압과 뒤이은 공안탄압으로 많은 동력을 잃고 지하화되었다.

겉으로 드러난 독립노조 운동이 중국 정부의 탄압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과는 별개로 민중들의 투쟁은 제도의 틀 밖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는데, 특히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에는 국영기업의

폐업과 정리해고에 따른 집단행동이 많았다. 국영기업 노동자들의 경우 일터와 주거를 공유하다 보니 단체행동이 용이했다. 또 상부의 평가에 연연하는 지역정부가 인민들의 단체행동을 물리력을 동원하여 진압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집단 해고가 잦아지면서 단체행동을 이끄는 조직가들이 자생적으로 출현하기 용이한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큰 원인이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몇몇 경제개발구역과 비국영기업에서 ‘지하노조운동’이 나타나고 있다. 공식적인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 지하노조 현상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농민공과 같은 유동 노동인구 가운데 자연스럽게 결성된 동향단체나 동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대학생들이 참여하여 느슨한 조직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기업 내에서 노동계약, 임금 등의 협상을 하기도 하고 쟁의에 참여하기도 하며 다른 기업의 동향인이나 동창이 어려움에 부딪히면 돕기도 한다.

2) 기업 내 노동자들의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유래하여 자발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노조라 칭하지는 않지만 산재나 쟁의 등의 노동 관련 사안에 개입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3) 노동자 사이에 조직된 공식적인 조직이 있다. 이들은 총공회와는 무관하게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걸고 행동을 조직하는데 기업과 지방 정부가 이를 묵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하노조 현상은 기업의 규정 위반 실태가 심각한데도 공회가 노동자의 이익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우 노동자들이 자구책으로 지하노조를 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독립노조운동 활동가들이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지하노조에 대해 총공회는 지원하지도 장려하지도 않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지하노조는 중국의 특이한 현상이지만 제도화, 공식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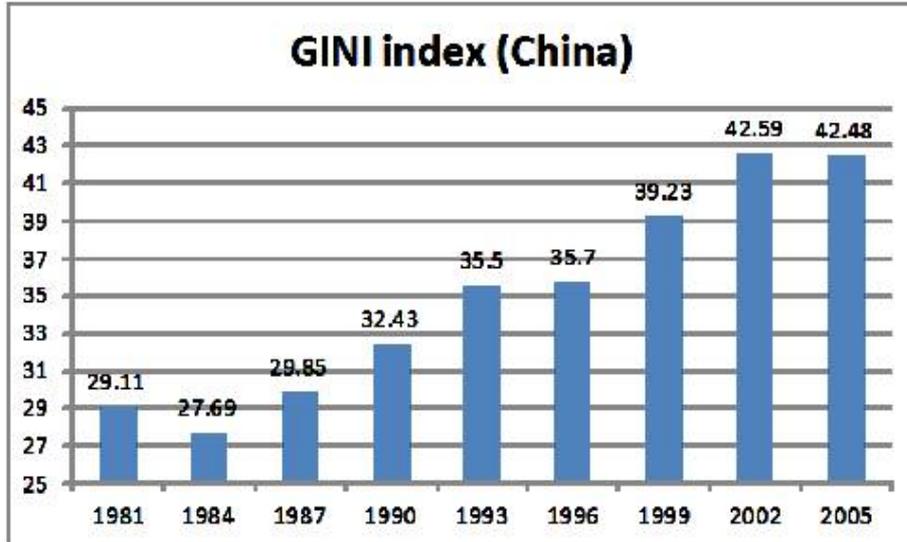
## 2. 사회경제적 환경

1978년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 중국의 경제는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그 그늘은 짙고 넓다. 사회주의적 사회계약은 해체되었으나 이를 대체할만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고,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사회적 갈등이 폭증하는 추세다.

동북재경대학의 ‘중국 소비 변화와 영향요소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도농간 소득격차는 1980년대 1.8~2.3배이던 것이 2009년에는 3.3배 수준으로 커졌고, 도시 주민의 주택, 의료 보조와 자녀교육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까지 감안하면 그 격차는 6배에 이른다. 도시지역 내에서도 최저 소득층의 수입은 1985년부터 2009년까지 12배 증가했으나 중간층과 최고소득층은 각각 21배와 37배 증가하여 격차가 커졌다.

중국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 진행속도도 매우 빠르다. 세계은행의 통계에 따르면 중

국의 지니계수는 1980년대에 20% 대에 머물다가 2000년대 들어 40% 대로 뛰어올랐다. 중국 정부가 2005년 이후 지니계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세계은행은 2009년의 중국 지니계수가 49%라고 추정했고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지니계수가 이미 50%를 넘어 60%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통상 지니계수가 40%를 넘으면 소득 불평등이 사회불안을 초래하는 위험수준으로 간주된다.



출처: 세계은행, 단위 (%)

중국의 사회적 갈등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장시간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중국의 노사분쟁 증가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공안국의 집단행동 통계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 약 1만 건에 달하던 집단행동이 2006년에는 6만 7,000건으로 상승하였으며 이 가운데 약 50%가 노동관련 집단행동인 것으로 파악된다. 최고인민재판소에 따르면 2008년 노동쟁의는 28만 건으로 2007년에 비해 93.93%가 증가했고, 2009년에는 상반기에만 17만 건이 접수돼 전해에 비해 30%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사회 각지에서 불만들이 터져 나오자 중국 정부는 소득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후진타오 정부는 조화사회 건설론을 내걸고 각종 노동자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조치를 단행하고 농민공과 도시노동력으로 나뉜 이중적인 노동시장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경우, 2004년 고물가와 저임금을 견디지 못한 농민공들이 대도시 임금노동을 포기하고 귀향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동부 및 남부의 생산밀집 지역에서 노동력부족 현상이 생기자 중국 당국은 그때까지 정체돼있던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후 전반적인 임금상승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방정부에 따라서는 최저임금이 한 번에 40%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다.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동계약법은 서면노동계약을 의무화하고 장기근속 노동자의 무기노동계약 전환을 명시했으며 단체협상을 권장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2008년 5월부터 시행된 노동분쟁조정법은 노동분쟁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당이나 국가의 정책을 노동자에게 전달하는 기구로 작용했던 노동조합의 역할 변화도 눈에 띈다. 중국 내 유일한 노동조합 조직인 중화전국총공회는 2000년대 들어 당의 전달벨트로서의 역할보다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강조하면서 노조조직을 확대와 노사정대화체제 구축, 단체협상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관례적으로 임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입을 거부해오던 정책을 바꿔 2003년부터 농민공을 주 조직대상으로 삼고 노조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

### 3. 관련 법률과 제도

중국의 노동 관련 규정은 2001년에 개정 시행된 노동조합법과 2007년 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된 노동계약법을 근간으로 한다.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된 노동계약법과 취업촉진법, 2008년 5월에 시행된 노동분쟁조정중재법으로 현대적인 노동 3법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된다. 2008년부터 제정에 들어간 임금조례는 임금인상 체계와 임금 단체교섭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포함될 예정이나 전국공상연합회 등의 반발로 인해 2012년 3월 현재까지 법안 제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 〈2000년 이후 노동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의 변화〉

- 2000년 노동사회보장부 단체임금협상에 관한 시행령
- 2001년 노동조합법 개정
- 2001년 노사관계 조정을 위한 전국 노사정 삼자회의체 구성
- 2001년 노동사회보장성, 총공회,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및 중국기업가연합회, 단체협상 및 협약 촉진에 관한 공통 통지문 발표
- 2003년 총공회 전국대회: 농민공 조직화 방침 천명
- 2004년 단체협약에 관한 규정
- 2005년 최저임금제에 관한 규정(개정)
- 2006년 노동사회보장성, 중화총공회, 중국기업가연합회, 지역/업종 단체협상 촉진을 위한 공통 의견문 발표
-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
- 2008년 취업촉진법 시행
- 2008년 연차유급휴가조례 시행
- 2008년 노동쟁의조정중재법 시행
- 2011년 사회보험법 시행
- 2012년 국무원, 호적관리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통지 발표
- 2012년 임금조례 제정 논의 중

## 노동조합법

- 1950년 노동조합법 최초 제정
  - \* 당의 전달벨트로서의 공회 성격 규정
- 2001년 개정,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
  - \* 당의 권리를 강조하는 대신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고 노동조합이 각급 정부와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히 함
  -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나 파업권 인정되지 않음
  - \* 사용주는 노동자 임금 총액의 2%(세전)를 노동조합 경비로 납부
  - \* 현금 이상 각급 노동조합의 이직, 휴직, 퇴직인원의 대우는 국가기관의 업무인원과 동등하게 대우

단체협상은 강제적 조항이 아닌 권고 사항이며 공회 설립에 법적 강제성이 있는지, 설립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다. 공회의 파업권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태업 등의 집단행동이 발생했을 때 사측과 협의를 진행할 책임이 공회에 주어져 있어 공회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노동계약법

- - 2007년 개정,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
    - \* 모든 고용 관계에서 노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
    - \* 2회 이상 단기고용계약을 했거나 한 회사(계열사 포함)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회사측에 '무기한 장기고용계약' 을 요구할 권리를 가짐
    - \* 산재, 산업현장의 안전, 노동쟁의 조정, 광산안전 등에 관한 시행령과 함께 공포
    - \* 고용인은 피고용인들의 퇴직금과 사회 복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수습기간과 초과근무에 대해 명확한 임금 기준을 제시해야 할 책임

총공회의 2008년도 통계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40%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임금체불과 강제노동의 사례도 빈번했다. 새 노동계약법은 1994년부터 시행된 구 계약법과 비교할 때 고용안정성을 높였다고 판단된다.

노동계약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업체에서 새 법률에 의해 보호될 노동자들을 미리 해고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 IT 기업 중 순위 1위인 화웨이기술유한공사는 전체 6만5천 명 중 7천 명을 해고했고 국영방송사인 CCTV도 전체 직원의 20%에 해당하는 1800명을 해고했다. 외자기업도 마찬가지로 2007년 10월 월마트는 중국에 있는 상품조달센터 인원 100명을 해고했고 까르푸 차이나는 4만 명이 넘는 중국 내 노동자들에게 각자의 근속기간이나 기존 노동계약의 만료 시기와 상관없이 2년짜리 노동계약을 2007년 12월 28일까지 다시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특성상 숙련 노동자들을 찾고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노동계약은 기업

측에도 유리한 점이 있었다. 더욱이 최저임금과 함께 전반적인 임금 수준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노동계약은 기업이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 최저임금 관련 규정

1993년 11월 노동부 - 기업최저임금규정

2003년 12월 노동 사회보장부 - 최저임금규정(2004년 3월부터 시행)

- 성, 자치구, 직할시 내 행정지역별 최저 임금 표준 제정

- 공회(노동조합), 기업연합회(기업가협회), 지역노동행정기구가 노사정협의를 통해 확정하고 노동부장부에 신고

- 월 최저임금표준과 시간당 최저임금표준 책정

\* 2011년 총 18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 13개 성시는 평균 20.6% 인상.

\* 32개 성시 중 3개 성시 최저임금 1,300 위안 돌파. 13개 1,000 위안 돌파.

\* 2011년 북경의 최저시급은 13.1 위안(2,344 원) - 사회보험 부담은 사측

\* 비정규노동, 24시간 교대노동 등에 대한 허점 존재

### 단체교섭 관련 규정

중국에는 단체교섭법이 따로 없고 단체교섭의 역사도 일천하지만 최근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성장하고 있다. 단체교섭 관행은 1980년대 개혁개방 초기에 몇몇 합자기업 중심의 극소수 기업에서 실험적으로 도입되었고 1990년대 초중반 노동조합법(1992년) 및 노동법(1994년) 채택 이후 서서히 확산되다가 1990년대 말부터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이후에는 양적인 확산과 더불어서 많은 지역에서 단체교섭 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의 단체교섭은 사실상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저기준들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지만 2000년대 들어서는 노사정 당사자들의 체계적인 지원, 노동법제적인 확충, 단체협약의 내용과 형식의 변화 등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노조의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고 지방정부와 공회,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노사정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정부의 임금정책과 노사 임금교섭의 조율이 시도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단체교섭이 중국적 노사관계 모델의 유력한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공회의 당/정부 의존성과 독자적인 임금정책의 부재, 공회 자체의 비민주성 등으로 단체교섭이 소득불균형 시정과 사회적 갈등 관리에 어느 정도 기여할지는 미지수이다.

#### 4. 중화전국총공회 中華全國總工會(ACFTU,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중화전국총공회는 1925년 5월 1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중국 내 유일한 전국 단위 노조 연맹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노조 조직으로 2010년 가입자 숫자만 2억4천만 명에 이른다. 31개의 지역연맹과 10개의 산업연맹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인일보工人日報>라는 기관지를 발행한다.

1927년 장제스가 집권하면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총공회를 탄압하여 많은 조합원들을 처형하고 정부 지원을 받는 어용노조들을 설립하였다.

1949년 마오쩌둥이 집권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유일한 노조 조직체로 재출범하였지만 1966년 문화혁명 외중에 다시 해체됐다. 총공회는 1976년에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1978년이 되어야 1957년 이후 최초의 총회를 개최하였다. 현재 총공회는 1990년대 초에 제정된 중국 노동조합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2008년에 개정된 노동법은 외국인 소유 기업체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기업체에 총공회 소속의 노조를 설립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총공회는 중국 내에서 노조 설립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 경쟁 조직을 설립하는 활동은 불법이다. 총공회는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싸우기보다는 산업 성장을 강조하는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단위기업 공회의 경우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해 주석과 부주석을 선출하고 사측과 협의를 통해 전임노조원의 숫자를 정한다. 하지만 중국의 공회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임금을 받는 관리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 공회가 경영진 및 기업 당위원회의 영향력 아래 있다. 최근 들어 당위원회와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기업 경영진으로부터 상대적인 독립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 단위 공회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 공회가 직접 공회활동 전문가를 채용하여 단위 공회에 파견하려는 움직임이나 단위 공회를 넘어 해당 지역의 동종업계를 포괄하는 지방/업종별 조직 강화 움직임도 있다.

2010년 9월 말 현재 총공회 소속 조합원 수는 약 2억3천9백만 명이며 전체 대상에서 노조가 조직된 비율은 50.9%, 노조 가입률은 74.7%, 농민공 조합원 숫자는 총 8천9백만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9월 말 현재 총 140만 건의 단체협약이 이루어져 244만 개 기업과 1억8천5백만 노동자들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한다.

국제노총(ITUC, 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은 중화전국총공회를 독립적인 노조 조직체로 인정하지 않으나 지속적인 대화를 갖고 있다.

## 5. 중국의 신노동운동

2000년대 후반 들어 중국의 노동자투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빌미로 고강도 저임금 노동이 강제되는 가운데 중국 내 지니계수가 0.5에 이를 정도로 사회적 불평등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과 생활물가는 급등했다. 실업과 저임금 때문에 귀향하는 농민공이 많아지면서 생산중심지들은 인력난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2010년 5월 혼다 포산공장에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일어나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2010년대 중국 노동자투쟁의 중심에는 비교적 학력이 높은 젊은 농민공들이 있다. 젊은 농민공들이 다양한 동향단체와 동창단체들로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과 SNS를 이용하여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들이 단위 현장을 넘어 연대하고 조직될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지식인 활동가들의 역할도 눈에 띈다. 폭스콘 사태를 비롯한 중국 내 노동자투쟁을 다룬 외신 기사들에서 신분을 감추고 위장 취업한 학출 활동가들의 발언을 드물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지식인 활동가들의 참여가 전 사회적으로 노동자투쟁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노동자투쟁이 단위 사업장을 넘어 전국적인 연대와 조직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혼다 포산공장의 파업 이후 전국적으로 노동자투쟁이 들불처럼 번지는 데는 35% 이상의 임금인상이라는 즉각적인 보상도 큰 원인이었겠지만, 활동가들의 목적의식적인 노력도 주요한 요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객관적인 자료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중국의 노동운동 역량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게 축적돼왔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

노조(공회)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분명하다는 점도 이전 세대와는 구별되는 점이다. 파업 현장마다 민주적인 노조 건설의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혼다 포산공장의 노동자들은 사측 관리자들로 구성된 기존의 공회와 별도로 자체 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측과 협상을 진행했으며 민주적인 절차로 노조를 구성할 권리를 명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방정부인 포산시는 상급 총공회 관리들을 파업 현장에 보내 물리적인 충돌을 빚게 했다. 결국 지역총공회가 혼다 포산공장의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해당 지역 공산당과 중화전국총공회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회를 만들겠다는 발표도 했지만 총공회의 역사와 구조를 봤을 때 젊은 농민공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혼다 포산공장의 파업	
<p>2010년 5월 17일 시작된 혼다 포산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은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장기간 파업이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뿐만 아니라 4개 요구조건-월 기본급 800위안 인상,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100위안씩 기본급 인상, 파업참가자 불이익 금지, 노조위원장 재선출-을 명확히 내걸고 매우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형태의 파업이었다. 특히 경제적 요구를 넘어 민주적 노조 건설이라는 정치적 요구를 내건 점에서는 중국 노동자 투쟁사에 하나의 획을 그은 사건이라 할 수 있다.</p> <p>1800명의 노동자가 일하는 혼다 포산공장은 2007년에 가동을 시작했고 공회는 2008년에 설립되었다.</p>	<p>2007년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조립라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비공식 회원제 조직인 '전연단(前沿團)'이 구성되었다. 철저한 서열과 규율을 가진 전연단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사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으나 사측보다 더 엄격하게 노동자들을 통제하면서 승진 기회를 독점하는 등 점차 자신들의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했다. 전연단의 영향력이 가장 클 때 공회를 설립하면서 전연단과 사측 관리자들이 노동자위원회를 장악했다.</p> <p>전연단과 사측의 협력으로 혼다 포산공장은 경쟁업체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치진 노동자들</p>

이 이직하는 경우가 늘어 2010년 상반기에만 조립라인 노동자의 반이 회사를 떠났다. 파업 당시 전체 노동자의 1/3이 3개월짜리 수습생이었다.

2010년 5월 17일 파업을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은 자체 대표자들을 내세워 임금인상을 요구했으나 유명무실하던 공회의 대표자가 사측 관리자 편에 서는 것을 보고 민주적으로 공회를 새로 조직할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5월 31일 상위 지역공회의 명찰을 단 사람들이 파업현장에 들이닥쳐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기존 공회 조직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상위 지역공회가 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소속 단위사업장의 노동자를 폭행한 이 사건으로 정부와 총공회 모두 비난을 받게 되었

다. 폭행사건이 난 지 이틀 만에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노동자를 위한 법률지원센터가 광저우에 설치됐다.

6월 1일 광저우자동차그룹의 총지배인 겸 전국인민대회 대의원이 조정자로 파견되면서 파업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조정자는 노동자 자체 대표단의 대표성을 인정하고 상위 지역공회에 사과문을 훈다 포산공장 게시판마다 게재할 것을 요구했으며 사측에는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답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6월 3일 노동자대표단과 사측은 35% 임금인상과 민주적인 공회 선거 보장 등에 합의했다.

### 펩시코 병입공장 노동자들의 조직적 투쟁

2011년 11월 4일 대만의 식음료 거대기업인 텡이 홀딩스의 자회사 텡이-아사회음료회사가 펩시코의 중국 내 24개 공장을 인수하여 펩시 탄산음료와 게토레이 브랜드들을 생산하고 판매, 유통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펩시코는 브랜드개발과 마케팅을 담당할 것이라 발표되었다.

충칭과 청두, 난창, 푸저우, 창샤 공장의 펩시코 공장 노동자 수천 명이 먼저 조직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공장 매각으로부터 일자리를 보호하고 임금과 복지혜택, 노동환경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2011년 11월 14일에 조직적으로 연차휴가에 들어갔다. 푸저우공장에서만 1,300명 노동자 중에서 최소 1,100명이 연차투쟁에 참여했고 다른 공장에서도 비슷한 숫자가 투쟁에 참여했다.

펩시코는 11월 15일에 성명을 내고 노동계약 내용에 변경은 없을 것이며 텡이 홀딩스와의 매각계약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대만 기업에 대한 중국 노동자들의 불신이 뿌리깊은데다 펩시코와 텡이의 기업문화가 매우 상이하고 적자상태인 24개 공장의 정상화를 위해 텡이가 노동강도를 높이고 다운사이징이나 구조조정 등

으로 비용을 감축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추가적인 보증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투쟁 지도자들은 중국에 있는 24개 펩시코 공장의 2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위를 조직했고 청두공장을 비롯한 10개 공장에서 파업을 조직했다. 또 중국판 트위터라고 할 수 있는 웨이보 등의 온라인매체와 SNS를 통해서 투쟁 소식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펩시코는 2012년 2월 11일 전 세계에서 8700명을 해고하여 지출을 절감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이번 해고계획에 중국 시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펩시코 중화구역 부사장은 중국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을 향후 2년간 동결할 것이라 밝혔다.

펩시코의 중국 공장 매각계약은 2012년 3월 현재 중국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펩시코 공장의 투쟁을 통해 2010년 훈다 포산공장의 파업 이후 짧은 기간 안에 중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 수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상당히 호의적인 가운데 단 일사업장 단위를 벗어나 공동투쟁을 조직하고 있으며 온라인매체와 SNS 활용이 눈에 띈다.

## 6. 맺음말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노동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노동계약법과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등 노동 관련 법제들이 연달아 발표되면서 노동환경이 현대화되고, 최저임금이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는데다 농민공 차별의 원인이 됐던 호적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이러한 노력은 사회

적 불평등 심화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지친 노동자들의 불만이 총체적인 사회적 저항으로 변하지 않도록 '관리' 하려는 시도로 비춰진다.

2000년대 후반부터 중국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화창구로 작동하는 공회와는 구별되는 자체 대표단을 내 세워 연대파업을 조직하고 인터넷과 SNS로 투쟁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이들은 임금인상과 노동환경 개선에서 더 나아가 공회의 민주화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파업에서는 정치 및 경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독립적인 노조 설립이 불법화된 중국에서 노동자들의 일차적 목표는 공회를 민주화하고 법적으로 규정된 노동자의 권리와 최저임금을 관철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각지에서 터져 나오는 노동자투쟁은 전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큰 균열을 내고 있다. 중국의 최저임금 동향에 따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최저임금이 영향을 받고 초국적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다른 저개발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을 거대한 시장으로 보면서도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할 생각만 하고 있던 초국적기업들과 값싼 중국제 수입품에 기대어 유지되던 각국의 불안정 저임금 노동시장은 초조하게 중국 노동자들의 투쟁과 중국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노동자투쟁과 노동운동이 어떤 궤적을 그릴 것인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추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중국의 노동자들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저임금 고강도 노동이 도를 넘은 중국에서 1세대 농민공들과 달리 돌아갈 고향도 없는 2세대 농민공들은 혼다 포산공장과 폭스콘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싸우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길에 몰려 있는 것이다.

국가기관화된 총공회의 존재와 지하로 숨은 독립노조운동, 외부 활동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견제 등으로 당장 연대할 대상을 찾기는 여의치 않아 보이지만 중국의 노동자투쟁과 노동운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 참고 자료

이장원 외, <중국 노사관계 변화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실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7  
박상수, "제도화 없는 노동운동 - 중국 노동운동의 역사적 퍼스펙티브", 『중국학보』 50, 2004  
Malcolm Warner, "Trade Unions in China: In Search of a new role in the 'harmonious society'"

## 참고사이트

China Strikes - [chinastrikes.crowdmap.com](http://chinastrikes.crowdmap.com)  
China Labor Bulletin - [www.clb.org.hk](http://www.clb.org.hk)  
China Labor Watch - [www.chinalaborwatch.org](http://www.chinalaborwatch.org)  
Socialist World - [www.socialistworld.net](http://www.socialistworld.net)  
ACFTU - [www.acftu.org.cn](http://www.acftu.org.cn)  
World Bank - [www.worldbank.org](http://www.worldbank.org)  
CIA - [www.cia.gov](http://www.cia.gov)

# 결론

본 보고서에서 보듯이 각국의 특정한 역사와 정치·경제적 환경에 따라 아시아지역 노동운동은 국가별로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일반적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식민지를 벗어난 후 불안정한 국가형성 과정과 독재통치를 경험하였다. 이 과정에서 노동운동이 심각한 탄압에 처했다. 또한 대부분의 아시아지역 국가에서 1980~1990년대에 걸쳐 시행된 외국인 투자 유치와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제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고, 1990년대 말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빈부 격차 심화와 양질의 일자리 감소, 비공식 부문 확대를 가속시켰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와 경제적 혼란은 해외이주를 야기하며 노동조합에는 낮은 조직률을 극복하는 데에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제도가 민주화된 이후에도 아시아지역노동운동은 지속적인 탄압에 처해 있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ILO의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도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측의 탄압과 정부의 묵인이나 직간접적 연루는 노동자의 노조설립, 단체교섭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을 가로막는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에서 사용자는 복수노조허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어용노조를 건설하여 민주노조를 약화시킨다. 많은 나라에서 복잡하고 긴 기간을 요구하는 노조 설립과 중재 절차는 사용자에게 노조를 탄압할 기회를 제공하고 합법 파업을 거의 불가능하게 한다. 캄보디아의 경우 대부분의 파업들이 불법적으로 진행되고 공권력으로 진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노조들이 파업을 아예 회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인도네시아 노동법의 경우에는 뻘짜실라(Pancasila) 이데올로기 의 무인정 조항은 노조가 항상 해체될 위험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시아국가의 노동운동은 대부분 반식민지 민족독립운동과 함께 출발하여 탈식민지 과정 속에서 정당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인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노조연맹과 노총은 정당의 의도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소위 정치적인 노조주의는 노조 간의 연대와 계급적 단결을 더 어렵게 한다.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에서 정부의 지원이나 노사정합의기구 참여기회도 노조 간의 경쟁을 야기한다. 그러나 노동운동진영 내에서 정당에 대한 종속, 노조 간의 경쟁과 갈등과 비민주주의적 노조운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조직도 있다. 인도네시아의 KASBI와 GSBI, 방글라데시의 현장노동자단체, 캄보디아의 CLC, 태국의 노조지역모임과 TLSC과 인도의 미소속 기업단위 노조설립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본 보고서가 다른 나라 중에 중국은 독특한 사례로 꼽힌다. 중국 공산당이 통제하는 중화전국총공회가 유일한 노총으로 그 밖의 모든 노조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노조 조직율도 높고 단체협약도 일반화되어 있지만 공회는 노동자의 대표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노동자투쟁에서 배척당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와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중국 노동자들의 최근 투쟁들도 기존의 공회를 배제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독립노조의 설립이 불법화된 상황에서 당의 전달창구, 사측의 대화창구로 작용하는 공회를 민주적으로 개혁하라는 요구로 노동자들의 요구가 모아지고 있는 추세다. 2000년대 후반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난 노동자투쟁에 중국 정부와 총공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포용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며, 중화전국총공회를 독립적인 노동자 조직체로 인정하지 않는 국제노총이 중국에 진출한 초국적기업 내 조직화사업과 아프리카 개발사업에 진출한 중국기업의 착취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중화전국총공회의 협력을 요청한 사실도 고민해볼 만하다. 중국노동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과 입장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조사 프로젝트를 통해서 위와 같은 아시아지역 노동자운동의 특징이 확인되었고 각국의 노동운동의 기본 현황이 소개되었다.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각국 노동자운동의 핵심 요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 노동자조직 성격에 대한 보다 자세한 파악, 해외진출기업, 특히 한국기업의 노동조건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이주동향 등이 중요한 조사 과제이며 구체적인 연대방안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거나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홀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해당나라의 노동운동과의 깊은 교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점에 관련해서는 교류와 연대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여러 조직이 본문에서 확인되었다. 태국 TLSC와 SERC, 인도네시아 KASBI와 GSBI, 캄보디아 CLC 등이 핵심 노조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캄보디아 CLEC와 WIC, 태국 TLC, 방글라데시의 섬유노동자연합포럼과 방글라데시 노동자연대센터도 중요한 노동운동 관련 단체이다. 노동자운동연구소는 앞으로 이러한 조직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보다 깊은 조사를 추진하고 연대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계획 중이다.